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발간사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의 방식과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의 둔화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은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성과가 집중되고, 지역·기업·세대·계층 간 격차와 자산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고르게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양적인 확대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회와 성과가 지역과 기업, 노동자와 청년 등 사회 구성원에게 폭넓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를 서로 대립하는 과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대기업·수출·부동산 중심 성장구조를 넘어 벤처·인공지능·문화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과 노동시장의 제도를 혁신하고 불평등과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장의 총량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과정, 성과의 배분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고부가가치·고용친화적 산업구조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경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전체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생태계를 다루는 **제1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체계를 모색하는 **제2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보고서는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고 그 성과를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확산한다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론**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이중의 과제를 진단하고, 기존 성장모델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전체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1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엔진: 혁신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다룹니다. 벤처기업의 창업 이후 스케일업, 제조와 현실공간에 AI를 접목하는 피지컬 AI,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K-컬처, 혁신산업과 지역경제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2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포용적 일자리 전략」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이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산불평

등과 세대 간 기회 격차, 일자리와 교육·훈련에서 이탈한 청년의 사회적 재진입, 인구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살펴보고,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연구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 완결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혁신과 포용을 각각 분리된 정책 영역으로 접근해 온 기존의 논의를 넘어, 이들을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 산업계와 노동계, 연구자와 시민들이 새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혁신의 성과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7.31.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본 연구의 구성



요약: 자산불평등

1. 서론: 문제 제기

가. 배경

- 한국경제의 양면성
 - 코스피가 8,000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시가총액도 7,000조원에 육박해 영국, 대만을 제치고 세계 5위도 가시권
 - 그러나 주가 폭등시에도 하락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익률이 하락
 - 소위 말하는 K-자형 성장추세가 극명하게 나타나, 반도체 부문은 폭풍 성장하는 반면 비반도체 부문은 추세 이하의 성장, 비상장-중소기업 또한 추세 이하의 실적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잠재적 우려
 - 현재의 엄청난 성과는 AI 등 특정 반도체 분야의 독보적인 실적 호황이 국가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가져올 우려
 - 과거 반도체 착시에 따른 IMF 위기, 조선업 착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착시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잘 보여줌
 - 또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안보가 불안해지면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
 - 선진국 함정에 빠지고 K-자형 성장, AI 발전 등의 후유증으로 취약 분야에 충격이 커지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위험사회 지표 더욱 악화될 우려

나. 연구 목적

- 자산불평등에 초점
 - 현재 상황은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고 많은 위험사회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
 - 사상 최고의 주가, 최대 경상수지, 수십년만의 최고 수준 명목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음

- 특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소득불평등에 비해 자산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그 후유증이 사회에 더 큰 충격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기가 훨씬 어려워 특별한 분석 및 대응방안 필요

- 세부적인 연구 목적

- 소득에 비해 실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 자산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특히 최근에 악화되는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설명하고, 그 중 실현가능성, 사회 전체적 후생 증진 측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언

2.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현황

가. 소득분배

- 계층별 소득분배

- 국내적으로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

- 기능별 소득분배

- 기능별 소득분배 추이는 별다른 변화 없음
-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있어 큰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대립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형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 규모별,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는 것
-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 이슈 이상으로 근로소득 내의 구조적인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며, 최근 삼성전자 노조 사태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나. 자산분배

- 자산 vs. 소득

- 지난 10여년 간의 국민순자산/명목GDP 배율 추이를 보면, 소득 대비 부가 거의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가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자산의 급등에 기인했으며, 또한 아직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순금융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고, 또한 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들에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함

- 자산의 계층별 분배

- 우리나라 계층별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나쁘고, 이러한 추세가 최근에는 더욱 악화되어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
- 지난 수년간 자산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최상위 계층의 자산이 빨리 증가한 데 기인하며, 최근 주식시장의 폭등은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큼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나쁜 반면 자산불평등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산불평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 자산분배의 정형화된 사실

- 자산분배는 소득분배보다 더 불평등, 금융자산 분배는 실물자산보다 더 불평등, 상속받은 자산분배는 다른 자산보다 더 불평등한 특징 등은 전세계적으로 정형화된 사실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자산 분배가 실물자산 분배보다 더 불평등: 현재는 금융자산이 순자산 전체의 1/4에 불과해 자산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실물자산이 크지만,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가 부동산 증가 속도보다 빨라 향후에는 자산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도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

3. 자산불평등의 문제점

가. 정치/사회적 문제

- 사회적 이동성 붕괴

- 부모의 부와 교육 기회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계급이 세습화될 우려
- 특히 청년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는 '자산 형성 포기' 현상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훼손

- 사회불안 증대 및 통합 저해

- 극심한 격차는 그룹 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건전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방해
- 또한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득세 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최근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발현하고 있는 포퓰리즘-팬덤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줌

나. 경제적 문제

● 경제동력 저하

- 불평등이 심하면, 인적자본 투자 저해, 자본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저소득층 금융접근 제한, 포용적 제도의 발전 저해 등으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증분석의 대체적 결론도, 자산의 편중이 단기적인 효율성을 일부 높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경제 불안정성 증대

- 자산 불평등은 특정 자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 거품을 발생시켜 금융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또한 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 증대해 경제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우려

다. 인구구조적 문제

● 불평등과 저출산/인구구조 위기와의 상관관계

- 자산 불평등이 심한 경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청년 가구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 '금수저'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산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되는 왜곡된 사회 현상이 나타남

●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의 심화

-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MZ세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정년 연장 요구, 연금 재정부담에 대한 청년층의 저항 등으로 세대 간 갈등 심화
- 대다수의 노인은 부동산 한 채만을 가진 '에셋 푸어(Asset Poor)'이거나 그마저도 없어 빈곤에 허덕이는 반면, 자산을 선점한 소수 고령층은 부를 축적하며 자녀에게 물려주는 세대 내 이중 구조가 형성

4. 자산불평등의 원인

가. 역사적/이론적 설명

- 역사적 설명
 - 석기시대 이후 근대사회까지, 사유재산, 국가, 계급제도 형성으로 불평등이 구조화되었으며, 제국 붕괴, 재해, 역병 등이 발생할 때 불평등 완화
 - 20세기 들어서 역사적으로 드문 평등화가 발생했으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함께 노동조합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시 급격히 악화
- 이론적 설명
 - 고전 이론가 중 루소는 사유재산. 법과 국가가 불평등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리카도, 맑스 등은 자본가의 소득 증대가 원인이라고 주장
 - 현대 이론가의 주류는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케티, 샌델, 올드 리지 등은 불평등이 제도, 이데올로기, 세습의 산물이라고 주장

나. 구조적 원인

- 세습 자본주의(Inheritocracy)의 귀환: 상속과 증여
 -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23년말 세계억만장자(10억달러 이상)들 재산 중 상속 재산이 자수 성가 부자들의 재산을 넘어섬
 - 세습 자본주의는 자산규모,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에 영향 받음: 최근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이 정체되면서 세습자본주의 강화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세습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착 심화되어 2024년말 억만장자 중 상속자 비율이 58%에 달함
 -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인구 고령화, 저성장으로 세습 자본주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상속·증여 금액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8.7% 수준으로 급증

다. 경기적 원인

- 부동산 거품과 주거 양극화의 연쇄 작용

-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동력은 단연 '부동산': 자산이 자산을 낳는 불로소득의 고리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산불평등 확대
-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 격차를 벌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까지 박탈

- 주식시장 등락과 자산 양극화

- 상위계층의 주식 및 배당 소득 집중으로 주식시장 폭등에 따라 자산불평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
-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부채를 안고 투자하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투자 손실과 더불어 채무부담 급증으로 거품 붕괴 과정에서 자산 분배 더욱 악화할 가능성

라. 정책적 원인

- 세제 왜곡에 따른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괴리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산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
- 우리나라의 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자본 소득이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형적 구조를 유지

- 모순 투성이의 부동산 정책

- 대다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거 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이슈에 이념적으로 접근
-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수요 억제로 일관한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 원인: 아파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올려, 거래가 크게 줄고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초래

5.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

가. 경제적 접근

- 안정화
 - 과도한 자산시장 버블은 급등할 때 뿐만 아니라 붕괴될 때도 불평등 악화: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급변동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안정화 관련 대책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최우선: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
 - 금융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불평등보다 크고 향후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 주식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실물시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화 대책 필요
- 경제성장
 - 경제성장을 통한 불평등 해소는 복지 정책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으므로, 성장 친화적인 재분배정책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청년·서민층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 이를 위해, 인적자본 투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사회적 이동성 강화,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적극 추진

나. 제도적 접근

- 재분배 정책
 - 다양한 세제 아이디어: 소득 누진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자본이득세 강화, 부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등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규제 아이디어: 기본소득제, 마이너스(-) 소득세, 이익공유제, 최저임금 연동제, 주택연금 제도의 획기적 확대, 최고임금제 등
- 자산 평등화: 소유의 민주화 지향
 - 사회상속제(Social Inheritance): 개인의 유산 상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징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일반 예산이 아닌 별도의 '청년 자산 기금'으로 조성해 모든 청년에게 사회가 '공통의 유산'으로 지급

- 기본자산제(Universal Basic Assets): 기업의 소유 구조에 노동자나 지역 사회의 지분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의 과실을 자본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지역사회와 공유

다. 도덕적 접근

● 능력주의(Meritocracy)

- 출신 배경, 신분,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 노력, 성취도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선발과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혁신, 행정 효율성 도모하는 제도
- 오늘날 능력주의가 공격받는 이유는 능력주의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고 변질되어 자산 세습 이상으로 불평등 고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의 폐기 아닌 개혁과 재설계 필요

● 사회적 공유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덕적 접근은 부의 축적을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와 운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
- 능력주의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등을 강조

라. 몇 가지 제언

● 현실 인식

- 소득보다 자산불평등 훨씬 심각하고 최근 들어와 더욱 악화되는 추세
- 자산불평등의 경우 해소방안을 찾기 어려움

● 두 가지 접근 원칙

- 첫째, 전체 파이의 크기 감축말아야 함: 성장친화적이면 최선이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장방해적인 아이디어는 지양
- 둘째, 보편적 혜택보다 취약층에게 혜택 집중되어야 함: 퍼주기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과 제고

● 현실적 방안

① 부동산시장 및 자산시장 안정화

- 부동산 정책은, 특히 선호지역 주거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린벨트 개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장중심 개발정책과 취약층을 위한 공공개발정책 병행

- 현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핍박하고 주식으로 불로소득 챙기는 사람은 응원하는 입장인데, 금융 불안정이 위기를 유발하고 취약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② 재분배 정책 및 제도 개혁

- 누진세 강화 등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는 강화되어야 함
- 최근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유세 도입보다는 재산, 증여 및 상속, 자본 이득에 대한 기존의 부과금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③ 청년자산 기금: 사회상속제 아이디어 응용

- 상속세나 증여세 등 부의 대물림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청년자산 기금'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만 18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 또는 분할 형태로 지급
- 청년자산 기금은 경제규모 파이 크기 줄이지 않고 인적자본투자 확대하며 사회적 취약층인 청년층 지원으로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

④ 소유 민주화 방안 현실적 조정: 기본자산제 혹은 이익공유제와 일부 철학 공유

-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단순히 직원들과의 나눠먹기 식 공유제가 되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거대부자들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 회사들의 지분을 광범위한 집단이 공유해 이익을 함께 향유
- 과거 우리나라에서 초과이익 공유제의 기본정신을 활용한 사례로 8.3 조치를 들 수 있는데, 막대한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며 생산성 제고, 근로자 복지, 기업공개(주식 상장) 등을 통해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
- 이에 따라 적극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완화, 중소기업-지방 등 취약 부문 지원, 주주기반 확대에 따른 금융자산 불평등 완화 등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남

⑤ 또다른 접근: 능력주의(Meritocracy) 개혁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장친화적인 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의 돈을 거두어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대신 시장의 활력을 높여 파이도 키우고 이익도 함께 향유하자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능력주의의 폐기 아닌 개혁과 재설계
- 능력주의 개혁은 '공정한 기회'를 통한 파이의 확대, 그에 따른 혜택의 공유, 사회적 연대 및 인식의 전환이 핵심

6.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가. 경기도의 주요 현황

- 소득 및 순자산 규모(2025년)

- 소득: 1위 세종 9,482만원, 2위 경기 8,488만원, 3위 울산 8,207만원
- 순자산: 1위 서울 7억 1,288만원, 2위 세종 6억 648만원, 3위 경기 5억 6,006만원

- 경기도의 소득 및 순자산 분배의 특징

- 전국 평균 수준의 양호한 분배 정도 보이고 있으며, 소득 및 순자산 모두 서울 대비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 내 지역간 소득 및 양극화가 존재하는데, 특히 도내 남북 지역 간 격차 크게 나타남
- 이러한 도내 지역 간 격차는 남부 중심의 행정과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정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낳기도 함

나. 경기도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경기도의 특성 및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 경기도 내에서는 계층 간 불균형 이슈보다 전국 내 분포, 최고 지역과의 격차가 더 큰 관심: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
- 경기도 내에서 도·농 간 격차보다 남북 간 지역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북부 지역 특화 개발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필요

-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 요구

-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도권 개발 제한을 완화해 수도권 전체의 수요·공급 균형 및 안정화를 추구하고, 선호지역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추진을 경기도에 허용해 강남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여러 곳 만들 필요
- 경기 북부 첨단산업 단지 개발: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경기 북부 지역에도 국가 차원에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확대

- 청년자산 기금 아이디어 확대: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을 기금 추가 재원으로 활용해 경기 지역 청년창업자를 특정해 추가 지원하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임금 지원 펀드로도 활용
- 개발이익 환수제 확대: 도내 개발정책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환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및 관련 금융 지원 등 청년층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

- 기타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 보육시설 공립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조기 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도내 보육시설 공립화를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전면 추진
- 다양한 중·고등학교 설립: 또한 인적자본을 양성하고 다양한 재능 평가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자사고 설립을 장려하고 지역할당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안전망 강화: 지역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세대별로 공유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동시에 보육,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업도 육성해 세대별 특화 일자리 지원 대책 추진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CONTENTS

I. 서론	1
1. 배경	3
2. 연구 목적	7
II.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현황	9
1. 소득분배	11
2. 자산분배	19
III. 자산불평등의 문제점	33
1. 정치/사회적 문제	36
2. 경제적 문제	38
3. 인구구조적 문제	41
IV. 자산불평등의 원인	43
1. 역사적/이론적 설명	46
2. 구조적 원인	52
3. 경기적 원인	55
4. 정책적 원인	57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CONTENTS

V.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	59
1. 경제적 접근	63
2. 제도적 접근	67
3. 도덕적 접근	71
4. 몇 가지 제언	74
VI.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81
1. 주요 현황	83
2. 경기도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87
참고문헌	89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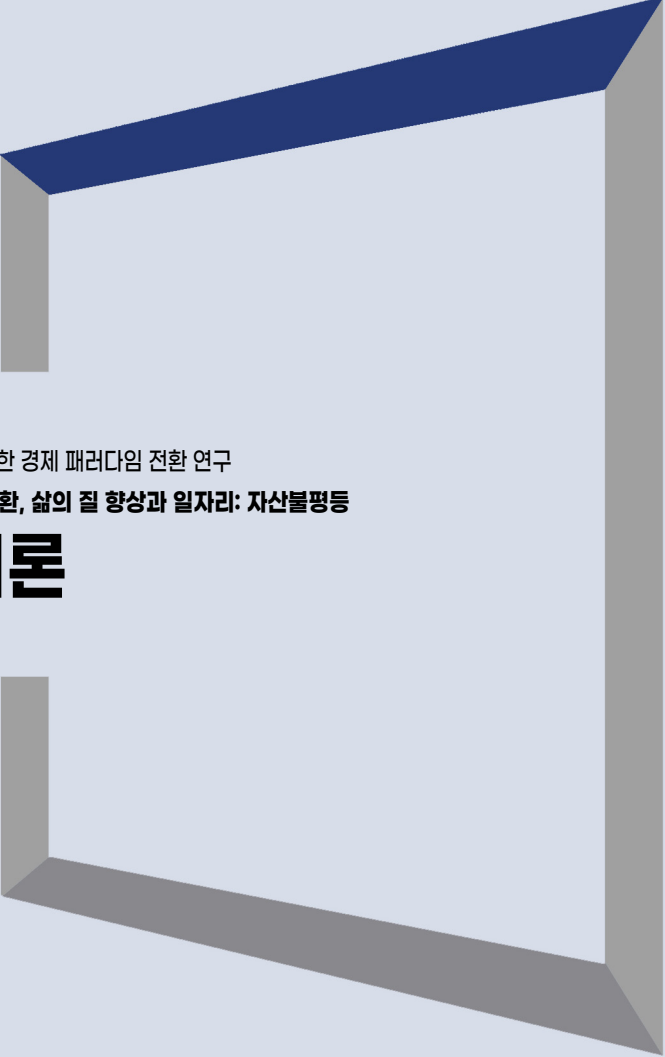
〈표 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 추이	16
〈표 2〉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21
〈표 3〉 각국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2020년)	23
〈표 4〉 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순자산 기준	26
〈표 5〉 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소득 기준	26
〈표 6〉 분위별 점유율 분포 (2024년)	27
〈표 7〉 지역별 가구당 소득 및 순자산 (2025년)	83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그림 목차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12
[그림 2] 소득 지니계수	13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14
[그림 4] OECD 국가의 소득분배 비교 (2023년)	15
[그림 5] 노동소득 분배율	16
[그림 6] 연도별 시간당 임금 차이	18
[그림 7] 국민순자산 규모 추세	20
[그림 8] 국민순자산/GDP 배율	22
[그림 9] 각국의 국민순자산 구성	23
[그림 10]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산 구성	24
[그림 11] 자산증가의 항목별 구성	25
[그림 12]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순자산 기준	28
[그림 13]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소득 기준	28
[그림 14]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	29
[그림 15]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vs. 자산점유율	30
[그림 16] 각국의 순자산 지니계수	30
[그림 17] 순자산 지니계수의 변화	31
[그림 18] OECD 국가의 연령별 빈곤율	42
[그림 19] Elephant Curve	50
[그림 20] 상속 vs. 자수성가	53
[그림 21] 한국의 상속 및 증여 규모	54
[그림 22] 지역별 가구당 소득 (2025년)	84
[그림 23] 지역별 가구당 순자산 (2025년)	85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I. 서론

I. 서론

1. 배경

1) 한국경제의 양면성

- 사상 최대의 실적
 - 주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어섰으며, 코스닥도 1,2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
 -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가 6,000조원을 훌쩍 뛰어 넘었고 코스닥도 600조원을 상회해, 합산 7,000조원에 근접하기도 함
 -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영국, 대만을 제치고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5위도 가시권.
 - 시가총액이 GDP의 거의 2.5배에 달함
 -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개별 선도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기록
 -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11번째로 1조달러 클럽에 가입
 -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7조 2,000억원, 하이닉스는 31조 5,600억원으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이익이 일본 100대 기업의 이익 총합보다 크게 나타남
- 그런데?
 - 주가 폭등시에도 하락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내 주식만 박살 아니었네...한 증시 종목 82%가 하락”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889150>)
 - 또한 상장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 덕분에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은 하락
 - 최근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장기 전망도 밝지는 않음
 - 2020년대 후반에는 1% 중반, 2030년 이후는 1% 초반 내지 그 이하로 전망하고 있음
 -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반도체 나홀로 성장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경기활성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 실제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체감 경기는 부정적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위 말하는 K-자형 성장추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비반도체 부문 추세 이하의 성장, 비상장-중소기업 또한 추세 이하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오히려 하락해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최저 수준

2) 잠재적 우려

- 착시 후유증
 - 현재의 엄청난 성과는 AI 등 특정 반도체 분야의 독보적인 실적 호황이 국가 전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가져올 우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 K-자형 성장추세는 반도체 착시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실적이 성장률, 수출 증가율 등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좋게 보이도록 만들
 - 그러나 그 외의 전통적인 주력 분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2026년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었지만 반도체를 빼면 증가폭은 0.2%에 불과
 - 이러한 착시 현상은 경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거품 경제를 자극해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과거 반도체 착시에 따른 IMF 외환위기, 조선업 착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착시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잘 보여줌
 - 1990년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렸으나, 이는 반도체에 국한된 편중된 성장 이었고,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자 다른 산업의 부실과 외환 부족 등 경제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외환위기를 맞음
 - 또한 2000년대 세계 1위의 조선업 호황에 취해 과잉공급을 유발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마르자 해운사들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
 - 현재는 IMF 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기초경제여건이 훨씬 취약한 상황인데, 반도체 착시 현상에 따른 후유증이 노정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일시적 착시 후유증이 아니라 장기 후유증 초래할 우려

- 선진국 함정

- 선진국 함정이란 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태를 말하며, 상당 기간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퇴보하면 선진국의 반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음을 의미(김인준 2026)
- 일반적으로 선진국 함정을 저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지만,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동반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저성장 추세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진행 및 확산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봉착한 심각한 문제
-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 간의 갈등구조가 첨예화되고 있고 심지어 분열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양극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요인으로 등장
- 더욱 큰 걱정은 이런 문제들이 중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위험사회 징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 여러 위험사회 지표들이 OECD 최악으로 나타남: 결혼율, 출산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수저계급론, 세대갈등, 젠더갈등, 이념갈등, 사회적 신뢰, 삶의 질, 행복도, 미래전망 등이 악화되면서 헬조선까지 등장

3) 현 정부 대책

- 기존 성장전략과는 다르다는 5대 대전환 성장전략 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6>)
- 지방 주도 성장
-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 문제점
- “지방”, “모두”, “지속”, “문화”, “평화” 등의 표현을 강조하면서 저성장-양극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천명
- 그러나 실현 가능성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일자리 관점에서 효과는?

- AI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 AI 발전 및 활용이 보편화되면 일부에서는 성장률이 최대 20%-30%까지 추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저성장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고착화시킨 다른 중요 원인들은 해결하기 어려움
- 더욱이 AI의 발전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데, 성장과 일자리를 함께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미흡

● 둘째, (소득 및 자산) 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파이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소득 및 자산 창출을 주도하는 계층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함
- 더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도 있음
- 기존의 성장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것처럼 기존 재분배정책과는 다른 성장 친화적인 재분배 전략 제시 필요

● 셋째, 선진국 함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은?

- 선진국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므로 유희노동력 증가, 양질의 취업 불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짐
- 또한 장기성장을 하락 전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만들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전반적 성장률 추락, K-자형 성장, AI 발전 등의 후유증으로 특히 취약 분야에 충격이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 전체적인 갈등 심화 및 행복도 감소로 위험지표 더욱 악화될 우려
- 더욱이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이미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많은 유럽국가들 및 일본 등이 겪고 있는 재정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높임

2. 연구 목적

1) 자산불평등에 초점

- 현재 상황은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고 많은 위험사회 지표가 나타나고 있음
- 진영 논리가 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과 부의 분배가 악화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일자리창출도 어려워짐
-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면 위험사회 징후가 더욱 악화되어 한국사회의 시스템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이영섭 편 2013)
- 성장동력 회복, 불평등 문제 완화, 위험사회 지표 개선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나, 여기서는 자산불평등 주제에 한정
- 자산불평등에 초점을 한정하는 이유
- 새로운 성장전략 이슈는 다른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엄청 심각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음: 전체 불평등의 흐름이 자산을 따라가고 있으며, 개인의 현재 노력보다 이미 보유한 자산이 경제적 위치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
- 자산불평등의 후유증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사회에 더 큰 충격
- 더욱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개선하기가 훨씬 어려움: 소득은 교육과 노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변수지만, 자산은 과거 축적의 결과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음
- 전세계적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개선 추세를 보이지만, 자산 불평등은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2) 세부적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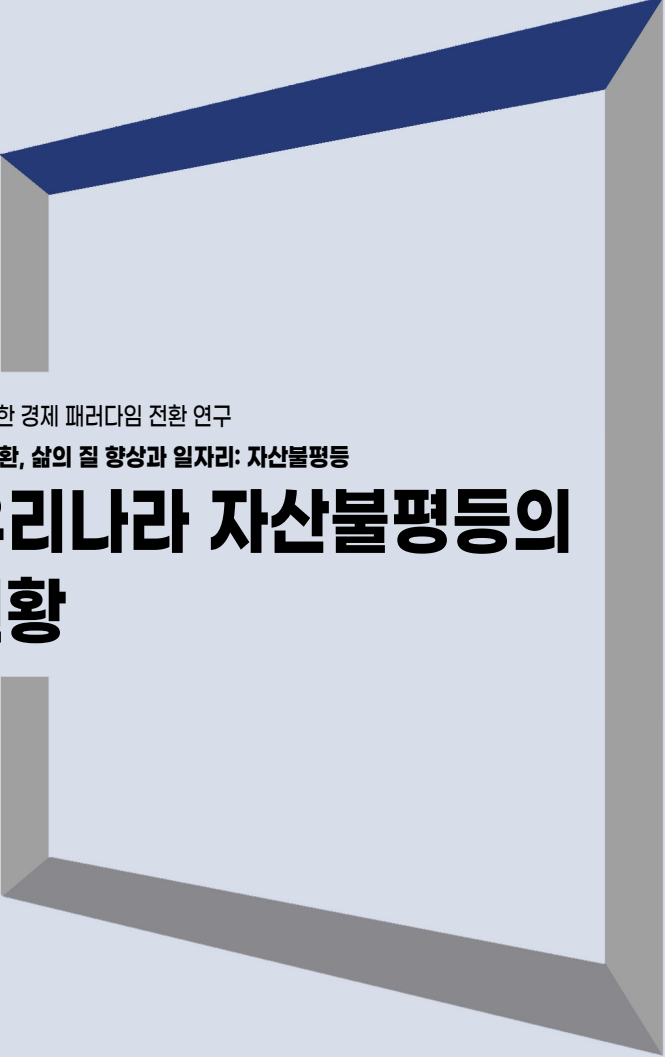
-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태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 우선 자산불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 자산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
- 특히 데이터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

- 자산불평등 악화의 원인 분석

- 자산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특히 최근에 악화되는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 역사적 발전 과정과 더불어 발생하는 원인 및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설명
-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정책적 원인도 함께 설명

-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

- 소득의 경우 누진세 등을 통한 정부이전으로 시장소득 vs.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개선 가능
- 그러나 자산의 경우 부유세 등 재분배정책으로 불평등 개선 가능할지 의문: 역사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시기는 거의 언제나 대규모 폭력과 재난이 동반되었으며, 평화롭고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깊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줄인 사례가 거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도덕적 측면으로 구분해 설명
- 여러 방안들 중 실현가능성, 사회 전체적 후생 증진 측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언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II.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현황

II.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현황

1. 소득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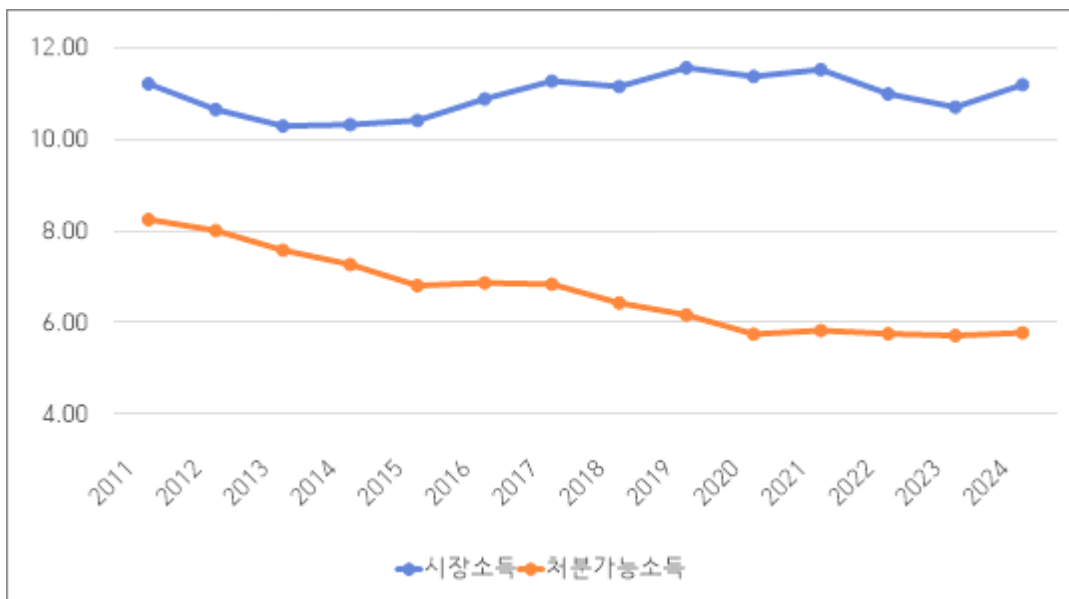
- 소득분배는 크게 계층별 분배와 기능별 분배로 나누어짐
- 계층별 소득분배
 - 계층별 소득분배는 모든 가계를 소득 원천과 무관하게 소득의 크기에 따라 배열한 후 일정 계층의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
 - 계층별 소득분배지표로 보통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을 이용
 -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 소득이 1분위(하위 20%)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살펴봄
 -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하면 0, 완전 불평등하면 1이 됨¹⁾
 -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 기능별 소득분배
 - 기능별 소득분배는 생산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소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
 -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보고 이들에게 발생하는 소득분배를 비교
 - 대개는 광의의 자본에 토지를 포함해서 생산요소를 크게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

1) 계층별 소득분배

- 5분위 배율
 - [그림 1]은 계층별 소득분배 통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5분위배율을 2011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두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음

¹⁾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누어 얻어진 값. 로렌츠 곡선은 인구누적비율과 해당 소득누적비율을 연결한 선. (이준구·이창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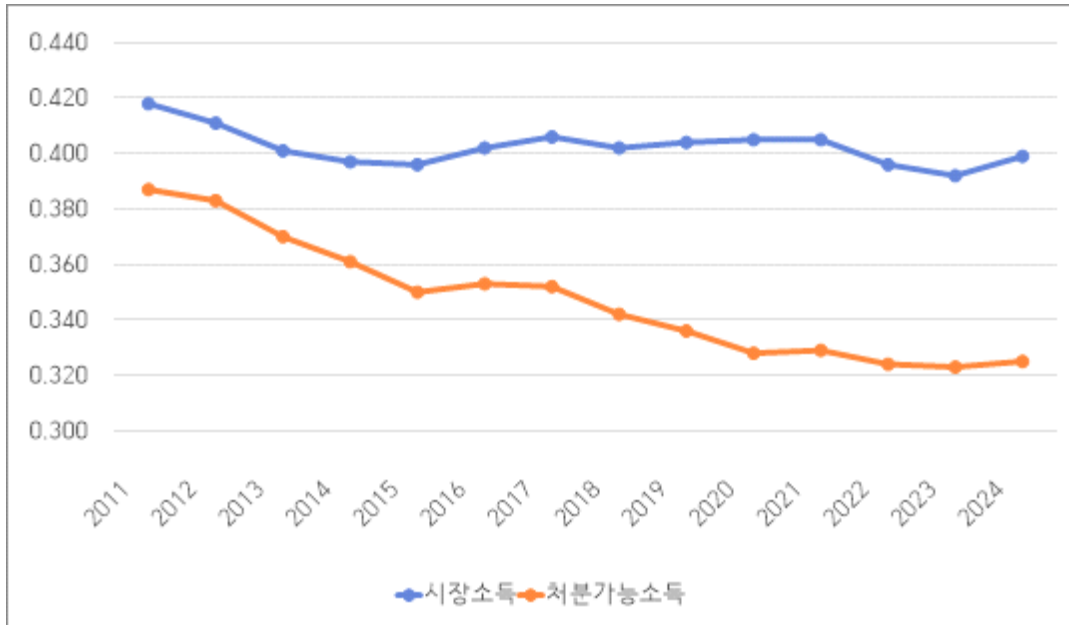
- 지난 10 여년간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0년대 초반 잠시 개선되다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2021년 이후 다시 개선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추세를 갖기보다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반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면서 동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1] 소득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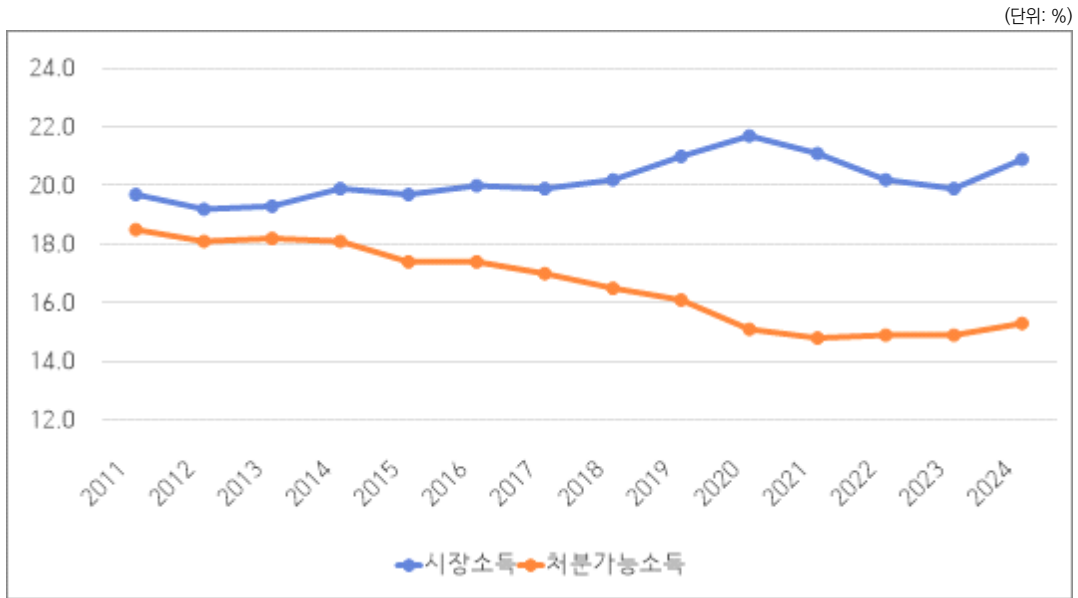
- 지니계수
 - [그림 2]는 또다른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변화를 시장소득 기준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음
 - 지니계수도 5분위배율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 여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대 초반 개선되다가 중반 이후 다소 악화되지만 최근 들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 소득 지니계수

- 상대적 빈곤율
 - [그림 3]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상대적 빈곤율은 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와 일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다소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도 함
 - 지난 10 여년간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약간의 등락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상대적인 측면에서 소득격차가 약간 악화된 느낌
 - 반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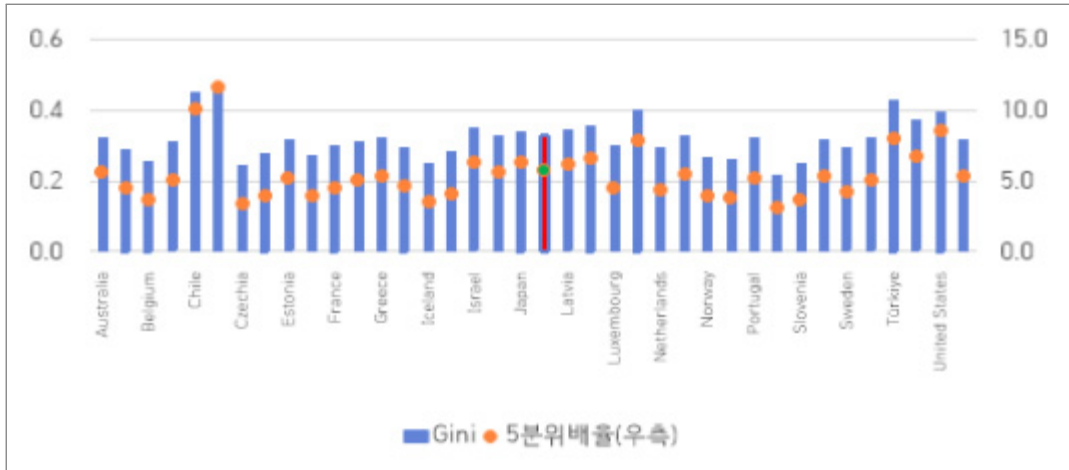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3] 상대적 빈곤율

● 계층별 소득분배 국제 비교

- 국내적으로 계층별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상태(안국신 2021; OECD 2024)
- [그림 4]는 OECD 국가들의 소득 5분위배율 및 소득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5분위배율은 5.8로서 OECD 평균인 5.3보다 높음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도 0.324로서 OECD 평균인 0.313보다 약간 높음



주: 우리나라는 빨간 막대로 표시.

자료: OECD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html>

【그림 4】 OECD 국가의 소득분배 비교 (2023년)

2) 기능별 소득분배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추이

- <표 1>은 기능별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구성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통계 작성상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누어짐
- 근로소득 비중은 2017년 63.8%에서 2025년 63.9%로 거의 변화가 없음
- 사업소득 비중은 22.1%에서 17.5%로 감소한 반면, 재산소득 비중은 6.4%에서 8.3%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6.5%에서 8.9%로 증가
- 재산소득의 비중이 2021년 및 2024~2025년에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 폭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적이전소득이 2021년 및 2022년에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정부지원 정책 때문

<표 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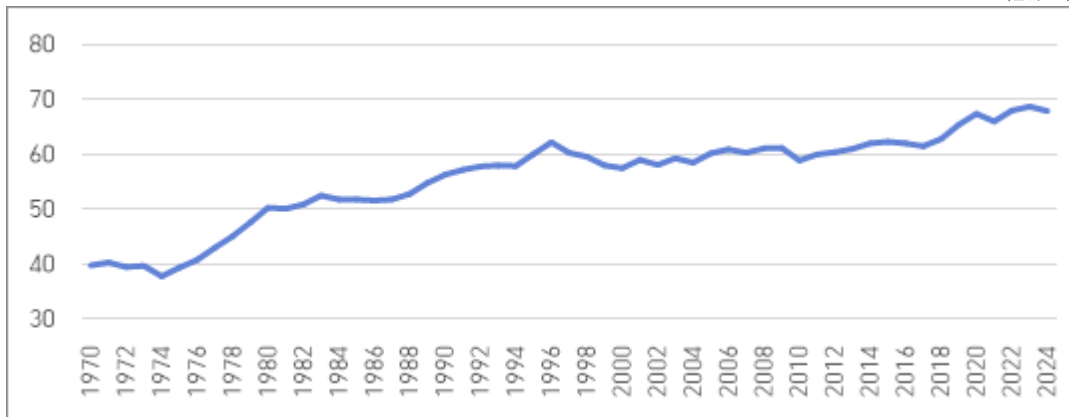
연도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017	100	63.5	22.1	6.4	6.5	1.5
2018	100	63.5	21.7	6.6	6.7	1.6
2019	100	64.5	20.1	6.5	7.2	1.7
2020	100	63.5	19.3	7.0	8.4	1.8
2021	100	62.4	18.4	7.0	10.6	1.6
2022	100	63.8	17.9	6.6	10.1	1.6
2023	100	64.9	17.8	6.4	9.2	1.6
2024	100	64.5	17.7	7.8	8.5	1.5
2025	100	63.9	17.5	8.3	8.9	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 [그림 5]는 197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노동 및 자본에 어떻게 분배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1970년대 초반 노동소득 분배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IMF 위기 발생 때까지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속하게 증가해 60%를 상회하기도 함
- IMF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 이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해 최근에는 거의 70% 수준에 육박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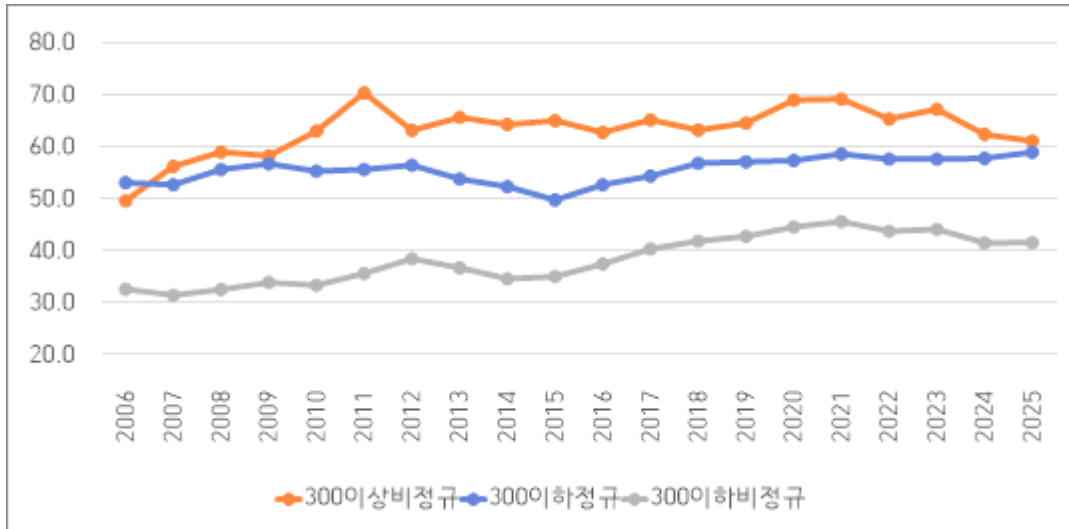
[그림 5] 노동소득 분배율

- 기능별 소득분배 추이의 주요 시사점

- 기능별 소득분배 통계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을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대립구도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우선 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변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노동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맑스나 피케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며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가 커진다는 내용이 맞지 않음
- 즉, 소득격차 문제를 노동과 자본이라는 계급 대립으로 보아서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움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소득분배

-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있어 더욱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근로소득의 격차가 소득분배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노동 vs. 자본 계급대립으로 접근하면 이를 간과해버릴 우려
- 근로소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 형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 규모별,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커다란 격차를 보임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근로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
- 2025년 8월 현재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 6,000원, 비정규직은 208만 8,000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80만 8,000원이며, 비정규직이 정규직 평균 임금의 53.6%를 받고 있음: 이 같은 임금 격차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
- 임금 격차는 고용 형태별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로도 크게 영향을 받음
- [그림 6]은 상대적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은 65.3,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6,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3.7 수준



주: 300인 이상 정규직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6] 연도별 시간당 임금 차이

● 노동조합과 소득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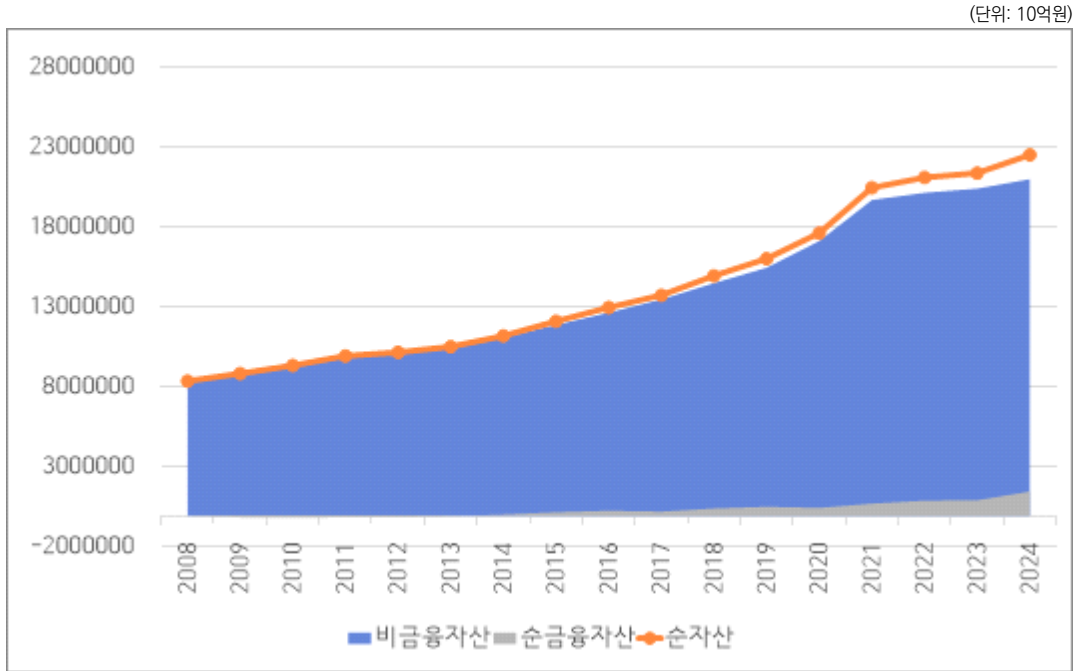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가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힘
-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률은 2024년 현재 13.0%인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각각 13.7% 및 1.2%로서 커다란 차이를 보임(고용노동부 2025)
- 기업규모별 가입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35.1%, 100-299명 기업 5.4%, 30-99명 기업 1.3%, 30명 미만 기업 0.1%로 나타남
- 노동 조합원 수를 보더라도 300명 이상 사업체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조원은 대부분 정규직 들이며, 대기업, 금융산업,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과 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보이거나 보호가 더 철저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
- 또한 대기업은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통계들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양극화 이슈 이상으로 근로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냄: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2. 자산분배

- 자산불평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소득 대비 자산의 변화
 - 소득을 나타내는 경제규모에 비해 자산의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봄
 - 소득 대비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부를 소유한 사람의 자산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자산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격차가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
- 자산의 계층별 소유 비중 변화
 - 계층별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자산 5분위 배율이나 자산 지니계수의 수치와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이를 소득의 계층별 분배와 비교해 자산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식

1) 자산 vs. 소득

- 국민순자산 추이
 - 국민순자산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으로 구성: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되며 순금융자산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값
 - [그림 7]은 우리나라 부의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순자산 규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24년 말 현재 국민순자산 규모는 2경 4,105조 원이며, 이 중 비금융자산이 2경 2,485조 원, 순금융자산이 1,620조 원
 -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국민순자산 중 순금융자산 비중이 0에 가까웠는데, 그 이후 순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비금융자산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름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7] 국민순자산 규모 추세

- 비금융자산
 - <표 2>는 비금융자산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 2024년 말 현재 비금융자산 총합은 2경 2,485조 원으로, 그 중 생산자산이 1경 289조 원으로 순자산의 45.8%를 차지하며 비생산자산은 1경 2,195조 원으로 54.2%를 차지
 - 생산자산 중에서는 건설자산이 7,52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생산자산 중에서는 토지자산이 1경 2,13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비금융자산 대부분이 건설 및 토지자산²⁾

²⁾ 아파트의 경우 건물은 건설자산에 땅은 토지자산에 포함.

〈표 2〉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

(단위: 천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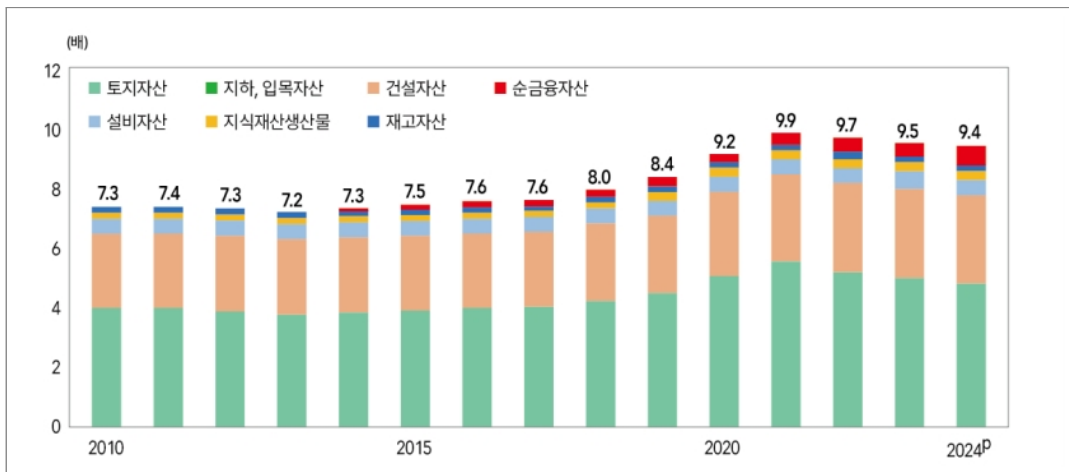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자산재생 산물	재고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2008	9.08	3.98	2.94	0.60	0.21	0.23	5.11	5.07	0.02	0.01
2009	9.61	4.26	3.15	0.64	0.23	0.25	5.35	5.32	0.02	0.01
2010	10.19	4.63	3.43	0.68	0.25	0.28	5.55	5.51	0.02	0.02
2011	10.77	5.01	3.68	0.73	0.27	0.32	5.77	5.72	0.02	0.02
2012	11.02	5.22	3.83	0.77	0.30	0.32	5.80	5.76	0.02	0.02
2013	11.33	5.40	3.98	0.78	0.32	0.32	5.93	5.89	0.02	0.02
2014	11.93	5.62	4.12	0.81	0.35	0.33	6.31	6.26	0.02	0.02
2015	12.75	5.83	4.27	0.86	0.37	0.33	6.91	6.87	0.02	0.02
2016	13.57	6.16	4.50	0.91	0.40	0.34	7.41	7.36	0.03	0.03
2017	14.45	6.60	4.83	0.96	0.44	0.36	7.85	7.80	0.03	0.03
2018	15.54	7.05	5.14	1.02	0.48	0.41	8.49	8.44	0.03	0.03
2019	16.57	7.41	5.40	1.07	0.52	0.43	9.16	9.11	0.03	0.03
2020	18.35	7.93	5.81	1.10	0.56	0.45	10.42	10.37	0.02	0.03
2021	21.10	8.77	6.46	1.19	0.62	0.50	12.32	12.27	0.02	0.03
2022	21.58	9.51	6.97	1.28	0.67	0.59	12.07	12.02	0.02	0.03
2023	21.85	9.90	7.26	1.33	0.72	0.60	11.95	11.89	0.02	0.03
2024	22.48	10.29	7.52	1.40	0.77	0.59	12.20	12.14	0.02	0.03

자료: 한국은행, ECOS.

● 국민순자산 vs. GDP

- [그림 8]은 명목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 및 그 비율이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하는지를 자산 형태별로 보여줌
-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7.7배 수준에서 유지되며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불과 4년만에 7.8배에서 9.6배로 1.8배나 급증했으며 2021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
- 2021년 직전 이 비율이 급증한 이유는, 생산자산 중에서 건설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비생산자산인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인
-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2021년 이후 안정되던 추세가 2025년~2026년에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 급등으로 다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Piketty and Zucman(2014)은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부의 비율이 커진다고 주장: 경제성장률이 낮더라도 사람들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저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민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이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들어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국민순자산/GDP 배율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훨씬 중요한 원인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8] 국민순자산/GDP 배율

- 최근 변화의 주요 특징
 - 지난 10여년간의 추이를 보면, 소득 대비 부가 거의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왔고 이러한 증가가 대부분 비생산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자산의 증가에 기인
 - 이는 부동산 등 부를 소유한 사람의 자산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자산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격차가 그만큼 커진 것을 의미
 - 또한 아직 크지는 않지만 최근 순금융자산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금융부채도 크게 증가
 - 이는 자산시장 폭등에 따라 금융자산을 소유한 자의 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금융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폭등에 따라 자산불평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 외국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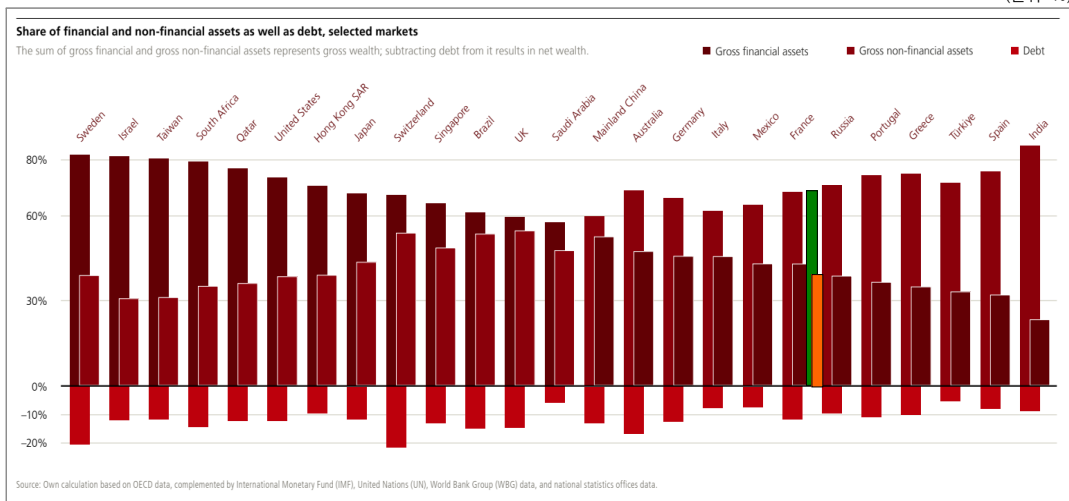
- <표 3>은 각국의 국민순자산/GDP 배율을 보여주고, (그림 9)는 국민순자산 중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음
- 2020년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은 9.2로서 전세계 평균 6.1에 비해 월등히 높고 표에 나타난 대상국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들에 중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프랑스 및 러시아와 유사한 정도

<표 3> 각국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2020년)

국가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호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멕시코	영국	미국	전세계
배율	9.2	8.2	7.7	7.2	6.8	6.2	6.0	5.9	5.5	4.8	4.3	6.1

자료: McKinsey(2021). p.7에 저자 첨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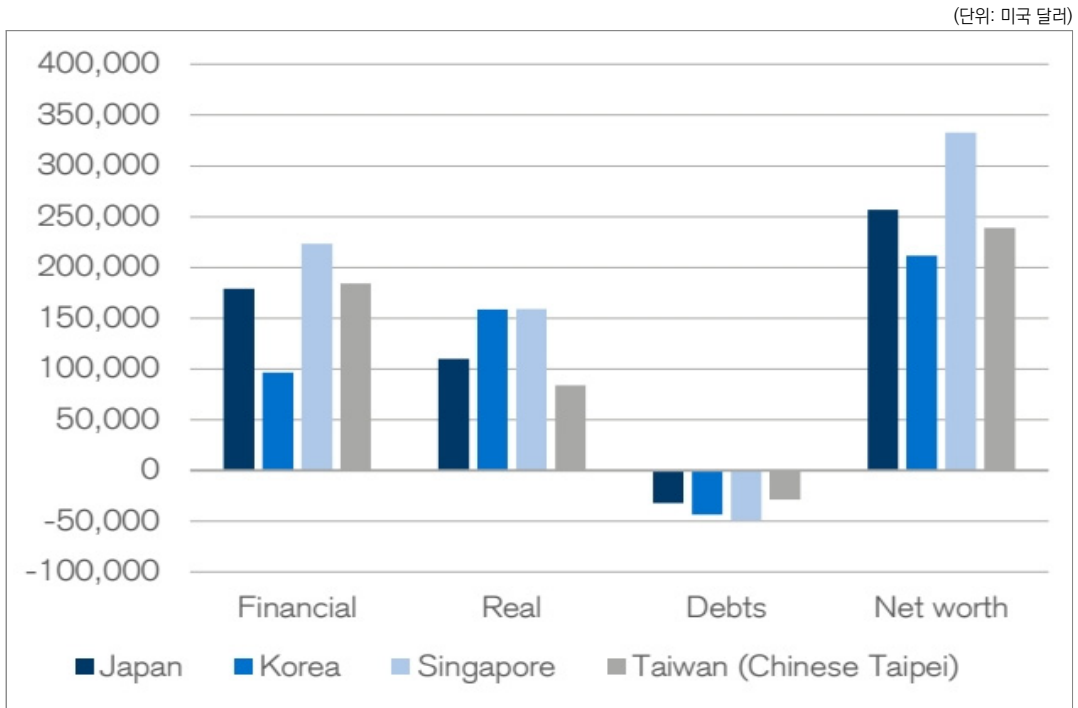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색으로 표시(초록=비금융자산, 주황=금융자산).

자료: UBS(2025), p.27에 저자 첨가.

[그림 9] 각국의 국민순자산 구성

● 동아시아 국가 비교

- [그림 10]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자산 구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유사한 환경의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을 선호함
- 4개 국가(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 자산이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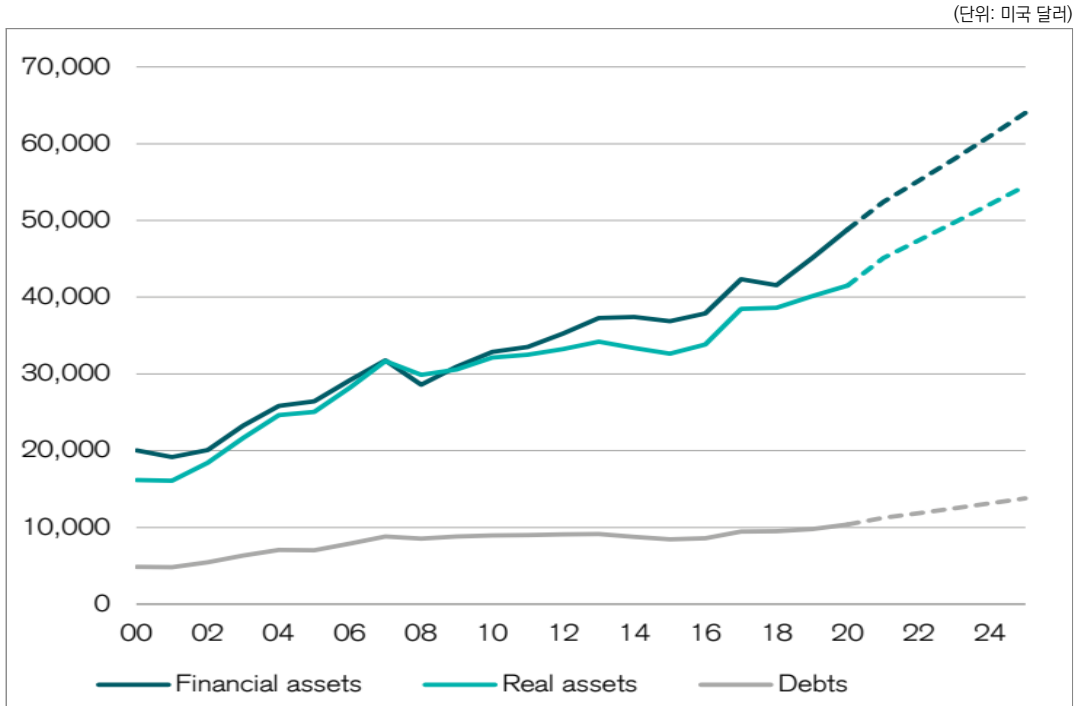


자료: Credit Suisse(2021), p.47.

[그림 10]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산 구성

● 자산증가 변화 요인

- 우리의 국민순자산/GDP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고 가구 총자산에서 금융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크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과대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
- 국민순자산/GDP 비율 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 등 부동산의 비중이 커진 것은 대규모 불로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의 위화감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부의 양극화 현상을 악화시키지만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질 때는 금융안정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해칠 우려
-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금융자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림 11], 이러한 자본시장 과열 현상도 부동산 거품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 여러 차례 금융위기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금융자산시장 거품이 붕괴할 경우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주: 전세계 성인의 1인당 자산 규모.
 자료: Credit Suisse(2021), p.31.

[그림 11] 자산증가의 항목별 구성

2) 자산의 계층별 분배

- 계층별 국민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순자산 기준
 - 계층별 분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순자산 5분위별 통계는 순자산 기준 및 소득 기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되고 있음
 - <표 4>는 순자산 기준 5분위별 자산보유액 및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순자산보유액을 보면, 2025년 현재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그룹은 평균 1,132만원, 2분위는 1억 461만원, 3분위는 2억 4,105만원, 4분위는 4억 7,853만원, 최상위 5분위는 15억 2,085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24년도에 비해 중하위 계층(1분위, 2분위, 3분위)은 보유액이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 특히 5분위 보유액은 크게 증가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점유율은 1분위 0.4%, 2분위 4.4%, 3분위 10.3%, 4분위 20.3%에 그친 반면 5분위의 점유율은 64.6%에 달함

- 2025년 순자산 기준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34.4로 소득 5분위 배율 11.2에 비해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 부의 분배는 소득분배 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고 양극화 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4> 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순자산 기준

(단위: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유액	2024년	44,894	1,199	10,526	24,233	46,919	141,564
	2025년	47,144	1,132	10,462	24,105	47,853	152,085
점유율	2024년	100	0.6	4.7	10.8	20.9	63.0
	2025년	100	0.4	4.4	10.3	20.3	64.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계층별 국민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소득 기준

- <표 5>에 나타난 2025년 소득 기준 순자산 5분위별 자산보유액은 1분위 그룹은 평균 1억 4,244만원, 2분위는 2억 4,529만원, 3분위는 3억 4,456만원, 4분위는 5억 1,066만원, 최상위 5분위는 11억 1,365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소득 기준 5분위별 순자산은 전년에 비해 1분위에서 4.9% 감소한 반면, 소득 2분위 이상에서는 모두 증가함
- 5분위별 점유율은 1분위 6.0%, 2분위 10.4%, 3분위 14.6%, 4분위 21.7%, 5분위 47.3%로 나타남
- 소득 기준 순자산 5분위 배율은 7.82로서 소득 5분위 배율 11.2보다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상속 또는 증여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로 인해 소득 1분위의 자산 보유액이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

<표 5> 5분위별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 소득 기준

(단위: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유액	2024년	44,894	14,974	23,742	33,722	48,767	103,252
	2025년	47,144	14,244	24,529	34,456	51,066	111,365
점유율	2024년	100.0	6.7	10.6	15.0	21.7	46.0
	2025년	100.0	6.0	10.4	14.6	21.7	47.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소득 vs. 순자산 분위별 점유율 비교

- <표 6>은 분위별로 소득 점유율과 순자산(소득 기준 및 순자산 기준)의 점유율을 보여줌
-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많으면 순자산도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은 소득 창출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소득분배(a)에 비해 자산분배(c)가 훨씬 불평등하게 되어 있음: 순자산 기준 5분위의 점유율은 1분위의 점유율에 비해 134.4배 이상 크게 나타나, 소득의 경우(11.2배)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각
- 한편 소득분배(a)와 소득분위별 자산분배(b)를 보면 대체로 유사하지만, 1분위에서 거의 두 배 가량 커다란 차이: 이는 소득이 거의 없어도 상속 등을 통해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소득분배보다 자산분배가 훨씬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됨

<표 6> 분위별 점유율 분포 (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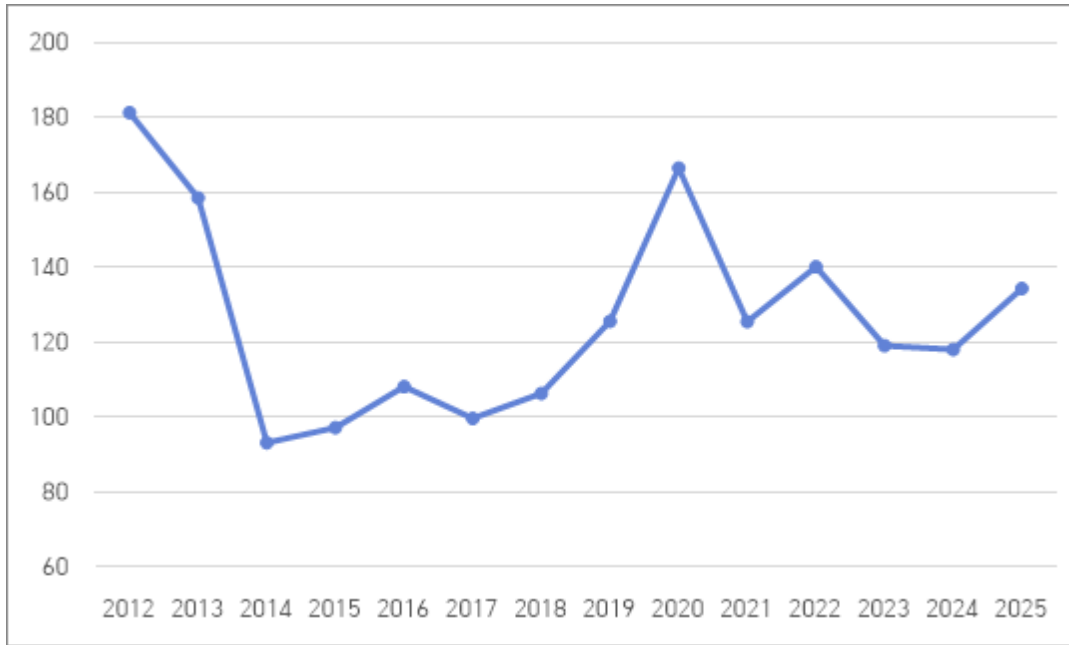
	소득 분위별 소득 점유율(a)	소득분위별 순자산 점유율(b)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c)
1분위	3.9	6.7	0.6
2분위	11.2	10.6	4.7
3분위	16.9	15.0	10.8
4분위	23.8	21.7	20.9
5분위	44.1	46.0	63.0

주: 소득분위는 시장소득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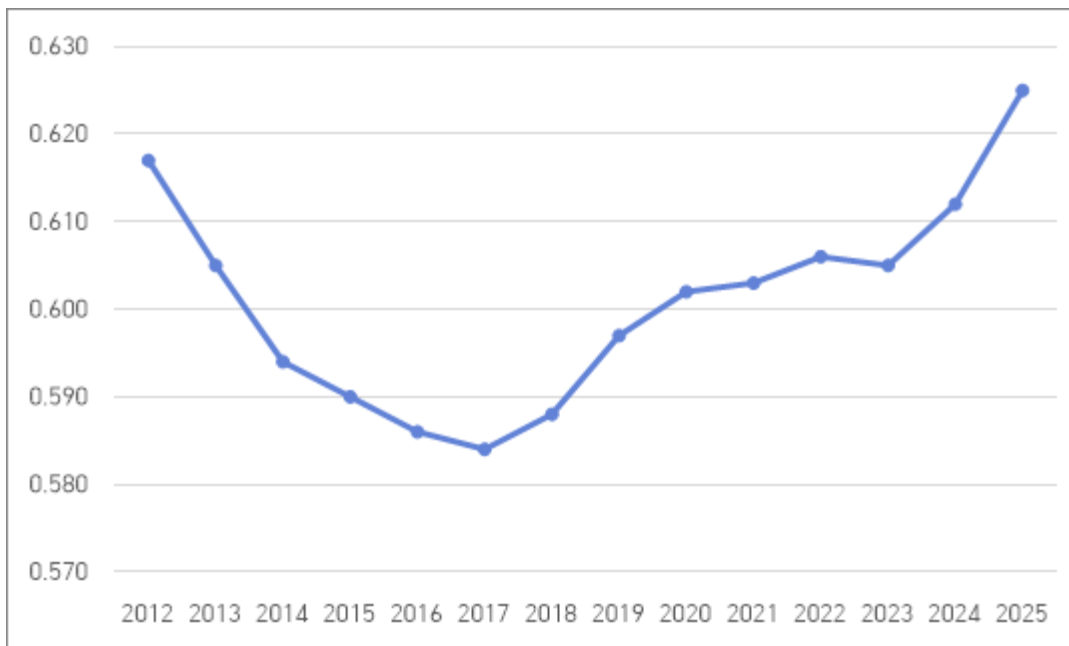
● 자산불평등 추이

- 우리나라 부의 분배는 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나쁜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최근 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 [그림 12]는 순자산 기준 순자산 5분위 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대 초반 하락하다가 2014년 이후 (코로나 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림 13]의 소득 기준 순자산 5분위배율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2025년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한편 부의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또다른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를 보아도 [그림 14],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2025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2025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소득 지니계수 0.399에 비해 훨씬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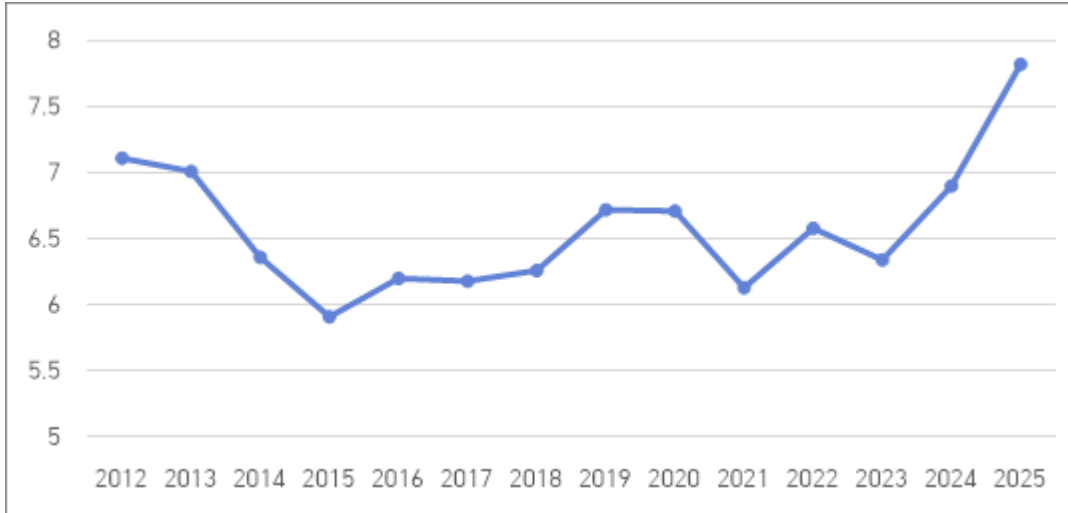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12]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순자산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13]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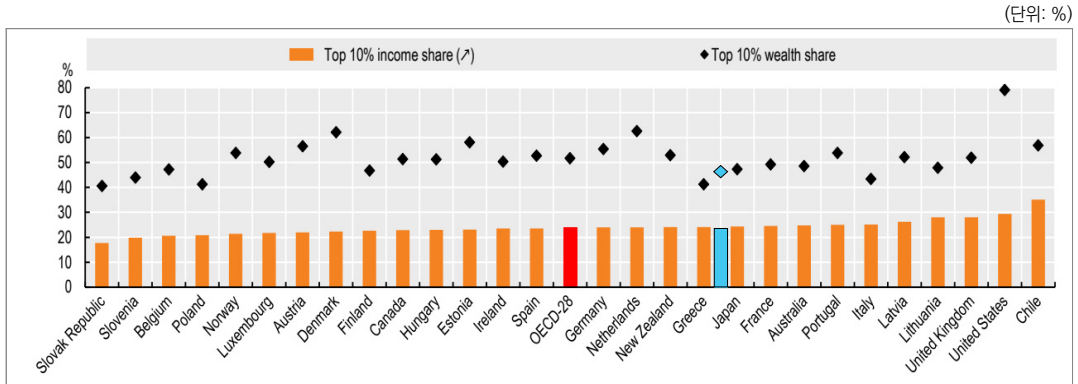
[그림 14]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

● 자산불평등 악화 원인

- 지난 수년간 자산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순자산 최상위 5분위의 자산이 빨리 증가한 데 기인
-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되어 있고 주식시장은 폭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순자산 최상위 계층의 부는 더욱 빠르게 증대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해 자산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부동산 거품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한다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우려
- 또한 주식시장 과열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한계

● 외국과의 비교

- [그림 15]는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과 자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47.3%로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24.1%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음
- 모든 나라에서 소득 점유율에 비해 자산 점유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함을 의미
-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의 자산점유율 47.3%는 OECD 평균인 51.0%보다 다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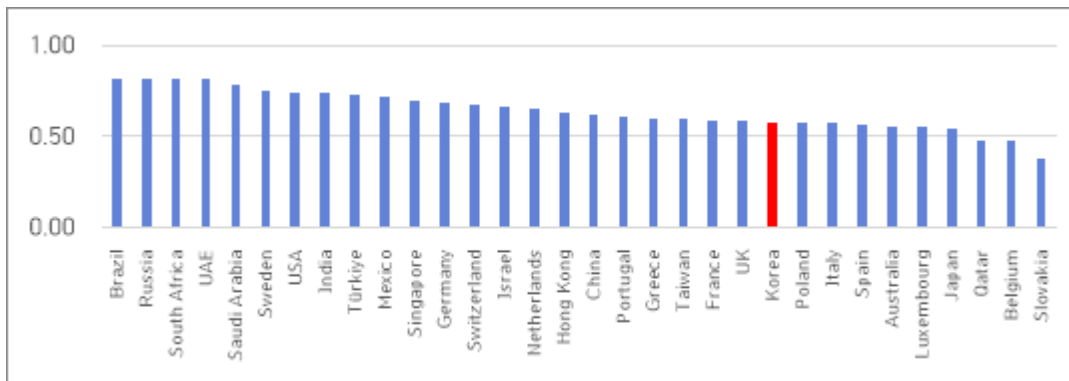


주: 파란색은 우리나라.

자료: OECD(2024), p.87에 저자 첨가.

[그림 15]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vs. 자산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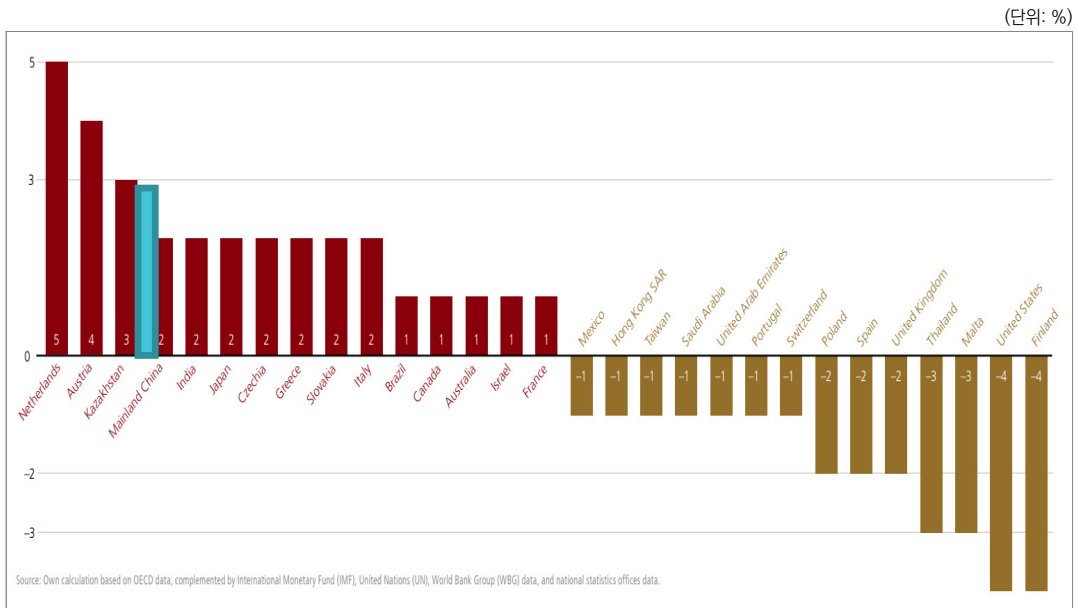
- 또한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도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 [그림 16]: 2024년 현재 32개국 중 23위로 좋음
-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나쁜 반면 자산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축적을 통한 자산 형성보다 증여, 자산버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자산 형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국회미래연구원 2024)



자료: USB(2025), p.30을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16] 각국의 순자산 지니계수

- 자산불평등의 최근 변화: 외국과의 비교
 - [그림 17]은 2019~2024 기간 중 각국에서의 자산불평등(순자산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자산불평등이 일부 국가에서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일부에서는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악화되는 추세
 - 동 기간 중 순자산 지니계수가 0.028만큼 악화되어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상당히 나빠진 그룹에 속하며, 거의 카자크스탄과 유사



주: 우리나라는 파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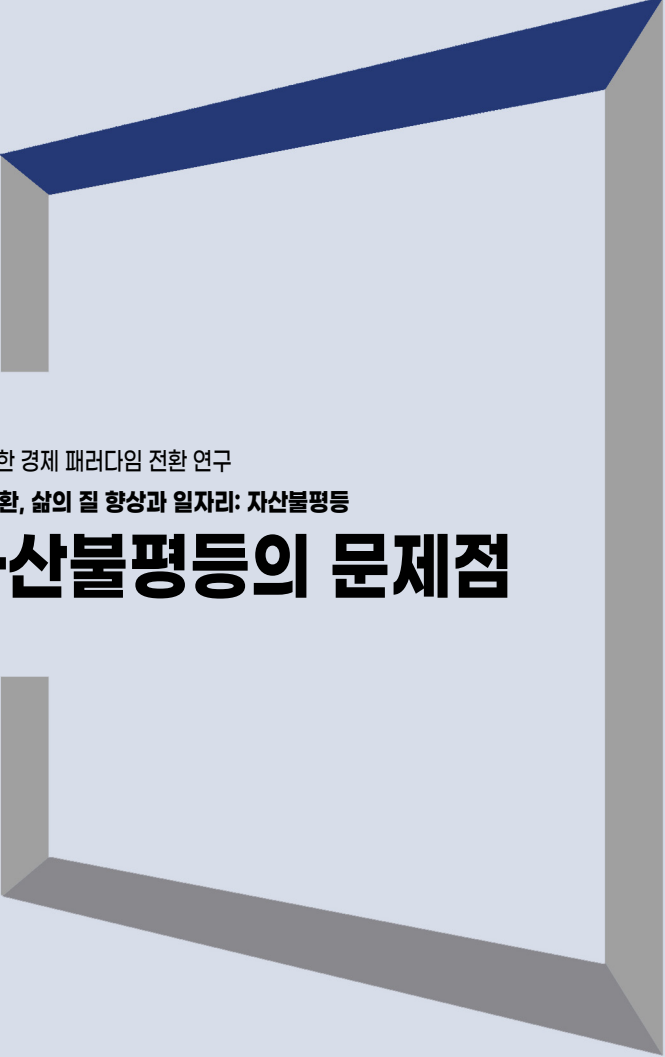
자료: USB(2025), p.29에 저자 첨가.

[그림 17] 순자산 지니계수의 변화

❖ 참고: 자산분배의 정형화된 사실

- Davies and Shorrocks(2000)는 기존의 부의 분배 연구를 바탕으로 자산분배의 정형화된 사실을 다섯 가지로 정리
 - 부의 분배는 소득분배보다 더 불평등
 - 금융자산 분배는 실물자산보다 더 불평등
 - 상속받은 자산 분배는 다른 자산보다 더 불평등
 -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가구가 존재

- 20세기에 자산 불평등 대체로 완화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자산 분배가 실물자산 분배보다 더 불평등
- 현재는 금융자산이 순자산 전체의 1/4에 불과해 자산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실물자산이 큼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가 부동산 증가 속도보다 빨라 향후에는 자산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도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Ⅲ. 자산불평등의 문제점

Ⅲ. 자산불평등의 문제점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 현상
 - PEW(2025) 서베이: 서베이 대상자의 84%가 심각하다고 생각
 - 54%는 매우 심각, 30%는 어느 정도 심각
- 특히 소득불평등보다도 자산불평등이 더 큰 문제
 -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 … 데이터로 확인됐다’.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0>
 - ‘소득만으론 깨기 어려운 불평등…자산 구조 재정립해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42102005>
- 경제적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은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남³⁾
 - 정치/사회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인구구조적 문제

³⁾ OECD(2015; 2021) 보고서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1. 정치/사회적 문제

1) 사회적 이동성 붕괴

- 자산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붕괴
 - 최근 들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격차 확대가 아니라 그 격차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
 - 고소득 가구가면서 자산도 많은 가구가 늘어나고, 근로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집중된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산소득이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
 - 소득·자산·고용 격차는 교육·인적자원·기술개발 투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격차는 부의 격차로 이어져 다시 소득·고용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 자산이 상속을 통해 대물림되면서 하위 계층이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차단
 - 경제적 위계는 점차 소득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어 계층 이동 경로로서 소득 역할이 약화되고 자산 격차는 세대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 커짐
 - 불평등이 심화되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면,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좌절하게 되어 미래세대 포기에 따른 인적 자원 낭비로 결국에는 새로운 동력 저하되고 국가 침몰 위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더욱이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로 창출되는 혜택이 일부 계층에 독식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얻은 부와 교육 기회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계급이 세습화될 우려 커짐
 - 특히 청년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는 ‘자산 형성 포기’ 현상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훼손
 - 소득 및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어 전방위적인 양극화 속에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설혹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경제성과에 상대적 불만을 느끼는 근로 빈곤계층이 점차 더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의 삼성전자 노조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성과를 독식하는 데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음

2) 사회 불안 증대 및 통합 저해

- 극심한 격차는 그룹 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건전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방해
 -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범죄, 자살 등 위험사회 지표 증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살인율과 강도율이 상승하고, 빈곤층의 자살률이 높아짐
 -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발전하더라도 경제 양극화가 악화되면 저소득·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은 여전히 낮을 것이고 이에 따라 만성적인 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기대 수명에도 악영향
 - 불평등이 심화되면 정치 시스템이 부유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느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는 투표율 저하,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득세 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최근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발현하고 있는 포퓰리즘-팬덤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줌
 - 소득과 부의 격차가 확대되면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며, 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경우 강력범죄 증가나 사회적 갈등, 폭동 등 심각한 병리 현상 유발
- 이는 공동체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 양극화가 심화되면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세계화 퇴화, 기술패권 경쟁 등 외적 요인들의 변화에 취약한 개개인들을 한계 상황에 처하게 만들
 - AI, 지정학적 충돌 등 이미 진행 혹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변화들의 추가적인 충격으로 양극화 더욱 악화되고 사회적 긴장을 초래
 - 과거와 달리 파괴적(disruptive) 충격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 요인(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진영간)들이 사회의 전 계층·전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 높음
 - 특히 AI의 폭발적인 발전은 AI 기술과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저임금으로 몰리는 ‘K-자형’ 불평등 심화
 - 이로 인해 자본과 기술을 가진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 간의 사회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커지고 사회적 통합 더욱 저해

2. 경제적 문제

1) 경제동력 저하

- 인적자본 투자 저해

- 자산이 특정 계층에 쏠리면, 자산이 많은 주체가 투자를 독점하고 다수의 잠재적 기업가나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이 둔화
-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축적이 저해되고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저소득 및 빈곤층은 자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교육 및 역량 개발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노동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

- 자본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생산성 저하

- 새케인스주의(New Keynesian)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불평등을 결합해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제시(이강국 2023)
- 현실에서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은행이 차입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돈을 빌리기 어려움
- 불평등이 심할수록 저소득층의 은행 접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난한 부모는 아이들이 똑똑하다 해도 그들에게 비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져, 결국 이 아이들은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심각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교육의 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하게 됨

- 소비 성향 감소 및 유효 수요 부족

- 부유할수록 소득 대비 소비하는 비율(한계소비성향)이 낮음. 따라서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면 경제 내 총소비가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
- 또한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그룹에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산 획득을 위한 부채 상환이나 주거비로 지출되면서 실질적인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형성
- 이렇게 총수요가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장기실업이나 신기술 투자 둔화 등의 이력효과를 발생시켜 생산성 상승과 장기적인 성장 저해로 이어짐(조순 외 2024)

- 불만 누적에 따른 갈등으로 투자 저해
 - 불평등이 지나치면 불만이 팽배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므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침
 - 역사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불평등이 더 심각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더 불안정해 성장률도 훨씬 낮았음
 - 또한 갈등 해소 및 사회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비용 증가로 생산활동 위축 및 성장 저해
- 불평등은 또한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돈과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된 사회는 포용적인 정치·경제적 제도가 발전하기 어렵고 지대추구가 만연해 경제주체들의 노동과 혁신 의욕이 약화됨
 - 불공정한 불평등은 작업장 차원에서도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노동의욕이 낮아져 생산성이 저하되고 성장에도 악영향
 - 불평등이 심각하고 포용적 제도의 미비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면, AI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기존의 노동자들이 혁신에 저항할 수 있고 결국에는 성장도 저해
- 자산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⁴⁾
 - 긍정적, 부정적, 관련 없음 등 다양한 연구 결과
 - 초기 자산(토지 등)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불평등 심화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관계를 보임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 실증분석의 대체적 결론
 - 자산의 편중은 단기적인 효율성을 일부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불완전성, 유효수요 위축, 인적자본 저해, 사회적 비용 증대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Steenbrink and Skali(2026)는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성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⁴⁾ 관련 논의는 김시원(2018), 이강국(2023), 한국은행(2010), Berg et al.(2018), Steenbrink and Skali(2026) 등을 참조할 것.

2) 경제 불안정성 증대

- 자산 가격 변동과 거시경제 불안정
 - 부동산 및 금융자산 집중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이들 특정 자산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김
 - 이는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 거품을 발생시켜 금융 및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경제효율성 저하와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자산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소수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 증대
 - 또한 자산의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고용 상실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가계가 대응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저하
- 경제양극화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어 경제안정성을 저해
 - 소득 및 자산이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게 되며, 과도한 부채가 취약성을 증대시켜 결국에는 위기의 원인으로 작동
 - 소득과 자산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붕괴하면 경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위축은 내수 기업의 매출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유발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 악화
 -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불만에 직면한 대중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포퓰리즘이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
 -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희생과 타협,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극히 어려워져 만병통치의 정책이라도 반대하는 그룹이 나타나 위기 극복이 난망

3. 인구구조적 문제

1) 불평등과 저출산/인구구조 위기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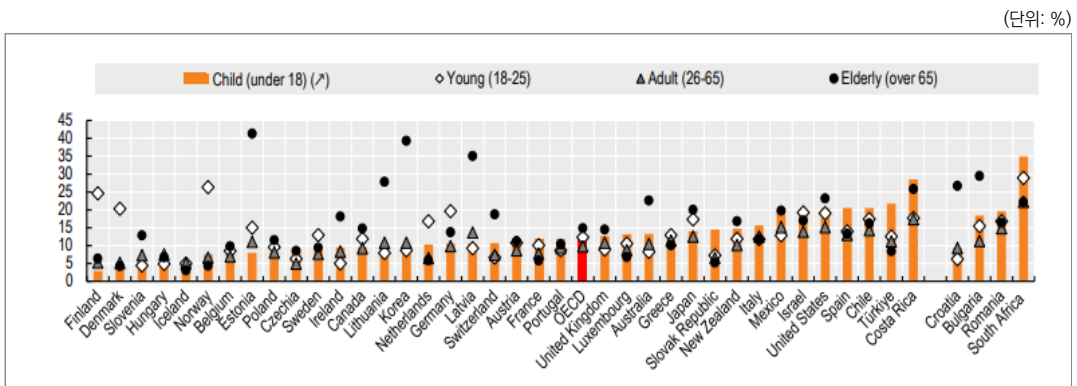
-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청년 가구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 집값 부담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 자녀에게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덩크족 증가⁵⁾
 - 양육 비용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자녀는 축복’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출산 가치관 변화
- 불평등에 따른 비결혼,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
 -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주거 및 고용 불안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초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부모로부터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기본적인 생애 과정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산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되는 왜곡된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와 자산 가치 상승 기회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대거 상경해 지방이 소멸될 우려
 - 수도권의 극심한 경쟁과 자산 폭등은 상경한 청년들의 생존 압박을 극대화하여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불평등과 저출산의 악순환이 가중됨

2) 세대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의 심화

- 베이비 부머와 MZ 세대 간 격차
 - 베이비부머 및 그 이전 세대(대략 60세 이상)가 가계 순자산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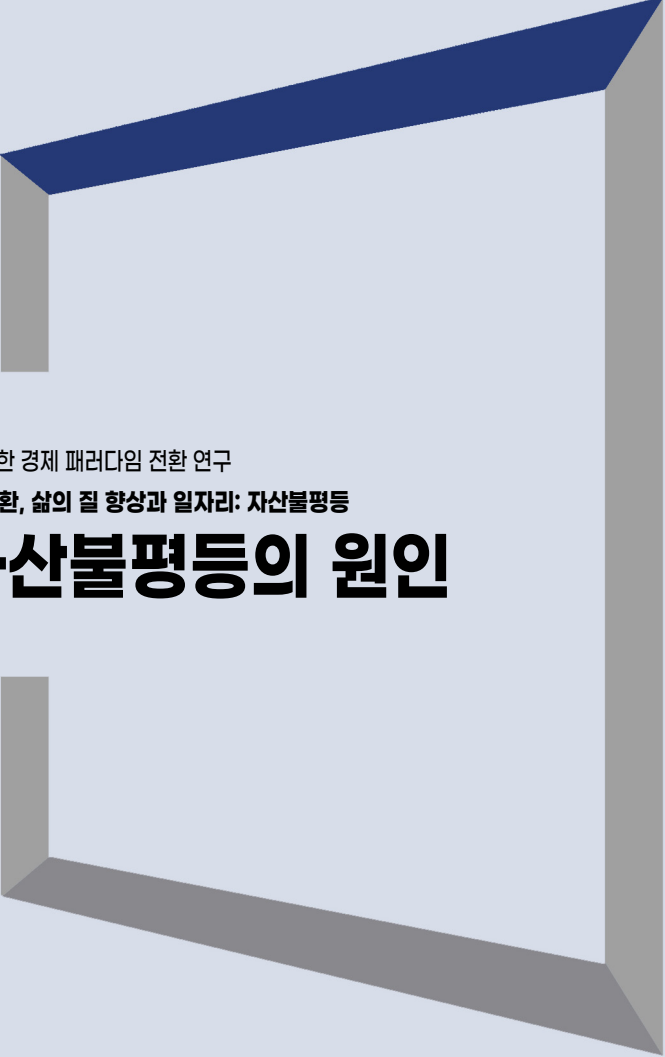
⁵⁾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란 부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을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자발적 유형과 비자발적 유형이 있다. 자발적 덩크족은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문제로 신경쓰기 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로이다. 비자발적 덩크족은 경제적 부담, 난임,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부류로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여가를 즐기는 자발적 덩크족과는 달리 출산 포기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4%A9%ED%81%AC%EC%A1%B1>)

-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부동산을 선점하며 자산을 축적했으나, MZ세대는 폭등한 자산 가격으로 인해 자력 주택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MZ세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되어 자산 격차가 대물림되는 구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좌절감을 겪으며 세대 간 갈등 심화
 -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연장 요구는 MZ세대에게 신규 채용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식되어 일자리 쟁탈전 양상을 보이며 갈등 더욱 악화
 - 이런 와중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복지 비용을 MZ세대가 세금과 연금 형태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세대 간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력과 유권자수 증가로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MZ세대와의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표출됨
- 노인 빈곤과 세대 내 격차
 -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세대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세대 내 양극화도 극단적으로 몰고 감
 - 60대 이상 고령층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40.4%)을 기록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은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노후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줌
 - 대다수의 노인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한 채만을 가진 '에셋 푸어(Asset Poor)'이거나 그마저도 없어 빈곤에 허덕이는 반면, 자산을 선점한 소수 고령층은 부를 축적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



자료: OECD(2024), p.89.

[그림 18] OECD 국가의 연령별 빈곤율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Ⅳ. 자산불평등의 원인

IV. 자산불평등의 원인

-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
 - 역사적/이론적 설명
 - 구조적 원인
 - 경기적 원인
 - 정책적 원인
- 참고: PEW Survey(2025)
 -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원인
 - “Political influence of the rich (is) seen as top contributor to economic inequality”
 - 86%가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불평등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
 - 60% 아주 중요, 26%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

1. 역사적/이론적 설명⁶⁾

1) 역사적 설명

- 석기시대
 - 잉여, 국가, 불평등의 출현
 -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저장 가능한 잉여와 세습 재산이 제한적이어서 구조적 불평등이 크지 않았음
 - 농업혁명 이후 토지·가축·노동력을 둘러싼 사유재산·상속·국가 형성으로 불평등이 구조화
- 고대사회
 - 제국, 도시국가, 계급의 출현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대 중국, 지중해 세계(특히 그리스·로마)를 중심으로 농업 제국과 도시국가 체제에서 엘리트 지주, 귀족, 노예제에 기반한 고도의 자산 불평등이 발달
- 중세사회
 - 재해, 역병(페스트 등)과 임금의 상승으로 불평등 완화
 -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제와 농노제 아래 토지에 묶인 농민과 지대와 십일조를 수취하는 지주, 교회, 귀족 간의 계급적 불평등 구조가 강화됨
 - 그러나 재국 붕괴, 흑사병과 반복적 역병이 발생해 불평등을 일정 기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 근대사회
 - 국가, 시장, 전쟁의 결합
 - 근대 초기에서 19세기까지 상비군, 조세국가, 세계무역·식민지 확대가 결합되면서, 유럽, 동아시아, 신대륙 식민지 등에서 상층 엘리트의 토지, 상업, 금융 자본이 집중
 - 노예제, 농노 해방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임금 노동, 지대 관계 속에서 불평등이 계속 심화
- 20세기 이후
 - 대 압착(Great Compression)과 불평등의 재 확대

⁶⁾ 이 부분은 박명호(2026)를 참고해 정리.

- 20세기 전반 양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중국 등 변혁적 혁명, 일부 지역의 국가 붕괴가 결함되어 대중 동원 전쟁, 폭력적 혁명, 국가 실패가 동시에 작동
- 선진국 엘리트 계층의 자산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누진세, 복지국가, 임금교섭 제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드문 평등화(대 압착)가 발생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화, 조세 경쟁, 노동조합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위 소득, 자산 비중이 다시 급격히 상승

2) 고전 이론가들의 설명

● 루소(Jean-Jacques Rousseau)

- 루소는 처음으로 불평등을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산물”로 체계적으로 주장
- 루소는 자연적(물리적) 불평등과 도덕/정치 불평등 구분
- 자연적 불평등: 나이, 체력, 건강, 지능 등 자연에서 주어진 차이
-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 부, 권력, 명예, 지위 등 사회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낸 차이로 정당화가 필요
-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 비교와 질투, 명예욕, 경쟁과 지배, 부의 축적 → 권력 집중
- 법과 국가는 질서와 평등을 위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불평등의 제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과 국가는 부자들이 자신 이익 보호하기 위한 장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설득해 법을 만든다”

● 리카도(David Ricardo)

- 영국 소득 불평등은 18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악화
- 18세기 후반 자본가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 자본가의 인구 비율은 줄면서 소득은 집중
-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 지주의 소득은 사회 발전 저해한다고 인식
- 생산 증대는 자본가의 투자로 가능: 이를 위해 명목임금 축소가 중요
- 해외 무역의 확대와 기계 발전으로 노동자의 식량과 필수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면 이윤은 상승

● 마르크스(Karl Marx)

- 노동자의 실질 임금 19세기 초까지 정체, 이후 상승 추세: 노동 귀족이라 불리는 부유 노동자 계층 등장

- 19세기 중반 이후 이윤 50% 증가, 임금 20% 상승
 -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노동 공장법, 선거권, 파업권, 아동 노동 금지 등
 - 노동소득 분배율은 실질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 자본가 비중 18세기 말 20% → 19세기 말 50%
 - 계급 구조: 자본가, 자영업자, 노동자, 룸펜
 -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가의 노동자 잉여가치 착취 구조
- 파레토(Vilfredo Pareto)
 - 파레토 소득분포, 파레토 계수
 - 소득 분포 곡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분배를 통해 분배 양상을 바꿀 수 없음
 - 파레토 계수는 국가별 큰 차이가 없고 1.5~2 사이에서 안정적이라고 주장
 - 그러나 파레토 계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 같은 국가 내에서도 어느 소득 분포 구간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계수 값이 달라짐
 - 미국의 파레토 계수 값은 기울기 절대값이 점차 커짐: 이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급하게 감소함을 시사
 - 독일의 파레토 계수는 절대값이 감소: 이는 상위층이 더 두껍다는 의미
 - 또한 소득과 부의 분포가 정규 분포 또는 대칭 분포가 아님: 계급 간 권력 투쟁에서 엘리트 간 권력 투쟁으로 강조점이 전환
 - 쿠즈네츠(Simon Kuznetz)
 - 쿠즈네츠는 최초로 전 세계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연구
 -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불평등이 다시 완화된다는 이론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파멸론과 정반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불평등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고 봄
 - 도시화 수준이 7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도시-농촌 간, 그리고 도시의 불평등 수준 모두 증가
 - 1980년 이후 선진국에서 불평등 현저히 상승하면서 쿠즈네츠 가설은 논란/거부 대상
 - 1930년대 이후 미국 불평등 완화 시기를 대평등화(Great Leveling) 시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

- 미국 1930~50년대 인종 차별은 유지되었으나 경제적 불평등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공교육 기회 확대, 노동 수요 증대, 최상위층 소득 제한 정책 도입 등에 기인
- 빈곤층 높은 소득에서 오는 이득이 상위층 인센티브 감소에서 오는 손실을 상쇄

3)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의 설명

- 주류 경제학에 나타난 불평등
 -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
 - 돈이 복지의 유일한 척도라면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없고 효율성만이 중요
 - 불공정성은 경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지 못한 결과
- 쉘페터(Joseph Schumpeter)
 -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식인 계층과 정치 세력은 불평등을 도덕적·이념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그 결과 복지 확대, 재분배 요구 증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 동원되면서 자본주의의 정당성이 약화됨을 우려
- 프리드만(Milton Friedman)
 - 불평등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고 무시
 - 불평등 완화는 미덕에 불이익을 주고 악덕을 보상하는 꼴: 소비보다 저축하고 여가보다 일 선호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 상속세는 미덕에 과세하고 낭비적 지출을 조장하는 나쁜 세금
 - 부유세 역시 악덕을 조장하고 미덕을 저해
 - 국가 간 조세 감면 경쟁을 위한 조세 피난처를 지지
- 베커(Gary Becker)
 - 인적 자본 이론
 - 완전한 자본시장이 있어도 부모의 자원 격차와 인적자본 보완성 때문에 세대 간 이동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
 - 상위층에서는 사실상 '인적자본 엘리트(human capital elite)'가 형성

4) 현대 비판론자들의 설명

- 비판론자들의 불평등 담론

- 불평등은 제도, 이데올로기, 세습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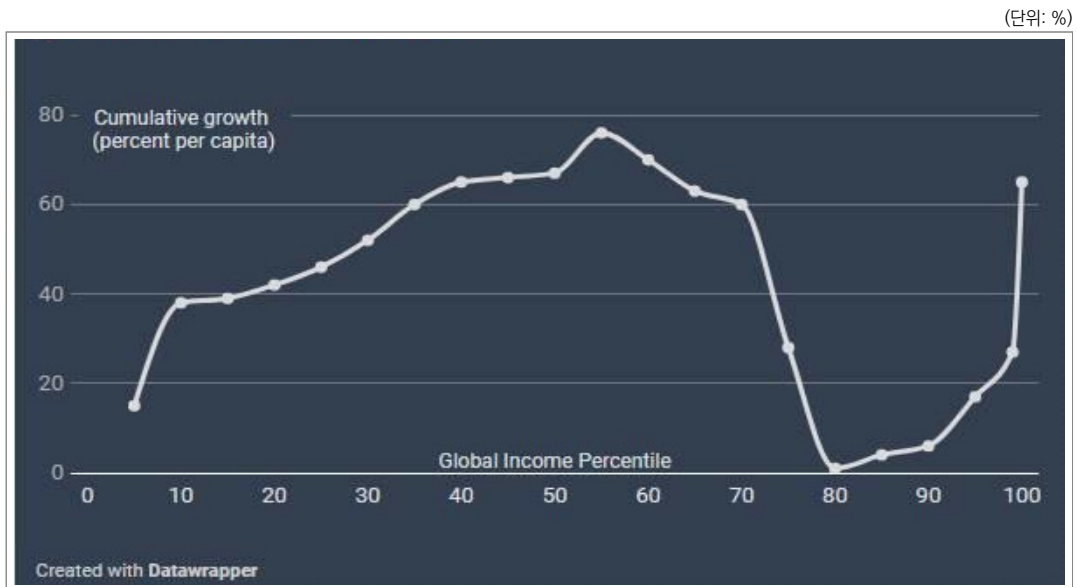
-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 국적을 무시하고 전 세계 개인을 소득순으로 배열

- 여전히 불평등은 크지만 중국, 인도 성장으로 추세적으로 완화

- Elephant Curve: 신흥국 중산층의 소득 급증(코끼리의 몸통), 선진국 중하위 계층의 소득 정체 또는 감소(코끼리의 움푹한 부분), 글로벌 상위 1%의 소득 폭발적 증가(코끼리의 코)

- 선진국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포퓰리즘, 보호무역, 반세계화의 배경



주: 1988년~2008년 기간 중 소득계층별 소득 증가율.

자료: Milanovic(2012).

[그림 19] Elephant Curve

- 피케티(Thomas Piketty)

- 21세기 자본론

- 불평등은 경제 법칙의 필연이 아니라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산물

- 역사적으로 평등이 확대된 시기는 전쟁, 누진세, 복지국가, 노동권 강화와 같은 강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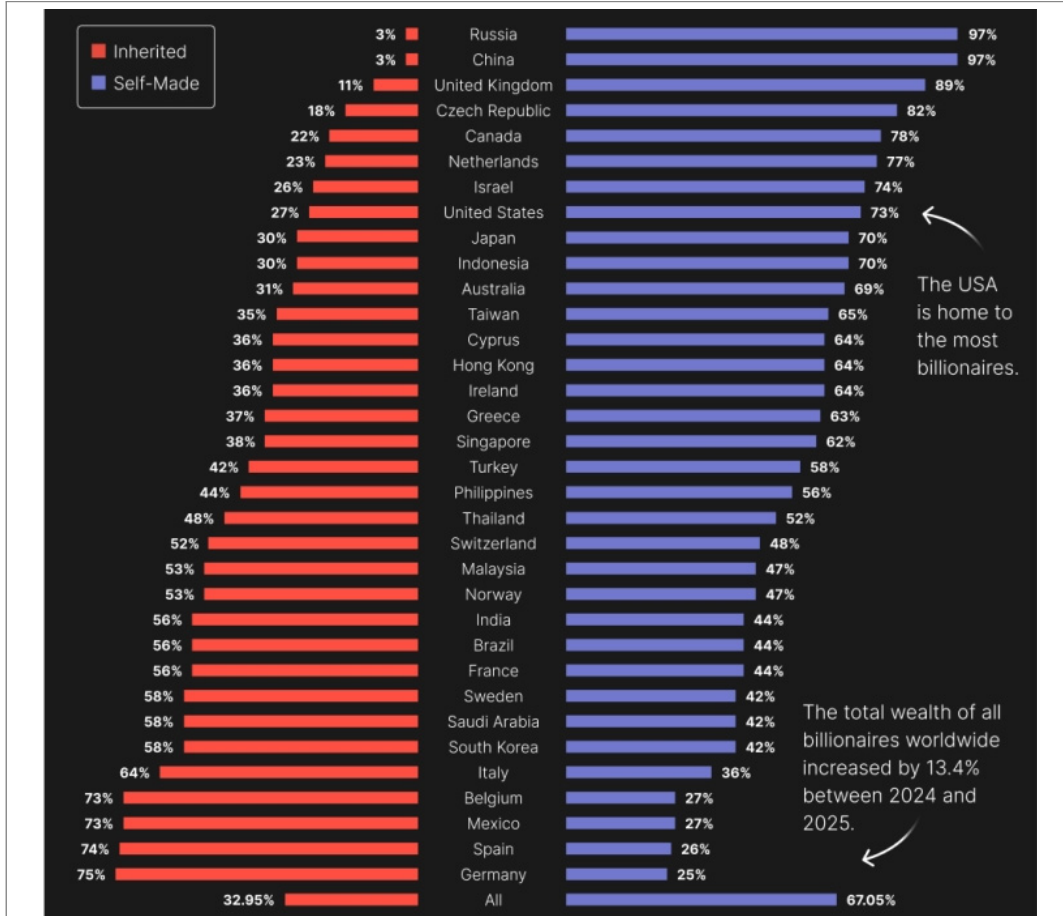
- 자본수익률(r)이 성장률(g)보다 높으면 부의 집중은 자동적으로 심화
 - 시장에 맡겨 두면 평등은 오지 않음: 능력, 시장 보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
 - 소득 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상속, 교육, 제도적 접근성에 크게 좌우됨
 - 해법: 강력한 누진세, 상속세, 보편적 교육·자산 접근
 - 소유의 민주화: 평등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
- 샌델(Michael Sandel)
 - 평등은 분배 이전에 도덕적 인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능력주의 비판: 시민적 존엄, 공정성 강조
 - 현대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격차보다 능력주의의 정당화
 - 이런 논리가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존엄을 파괴
 -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 패자에게 굴욕을 주면서 도덕적 평등을 붕괴
 - 평등은 기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단순한 기회균등이 정의가 아님
 - 출발선이 다른데 결과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는 부정의
 - 평등이란 소득을 완전히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상태
 - 평등은 “얼마를 갖는가”보다 “어떻게 서로를 평가하는가”의 문제
 - 울드리지(Adrian Wooldridge)
 - Aristocracy of Talent(능력주의 두 얼굴)
 - Meritocracy(능력주의): 출신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에 따른 선발과 보상 체계로 국가 경쟁력, 혁신, 행정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
 - 능력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능력주의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이동성 확대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
 - 오늘날 능력주의는 본연의 모습을 잃고 타락해, 불평등 심화, 엘리트의 자기 세습화, 대중의 엘리트 불신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구조적 원인

1) 상속과 증여

- 세습 자본주의(Inheritocracy)의 귀환
 -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
 - UBS(2023)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말 세계억만장자(10억달러 이상)들 재산 중 상속 재산이 자수성가 부자들의 재산을 넘어섬
 - 1년 동안 53명의 상속인이 1,508억달러(약 196조 원)를 물려받아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고, 같은 기간 자수성가로 돈을 모아 억만장자로 올라선 84명의 재산은 1,407억달러(약 183조 원) 수준으로, 상속 재산이 자수성가 부자들의 재산을 넘어선 것은 UBS가 약 10년 전부터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 1900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도 하였음.
 - 20세기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줄었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도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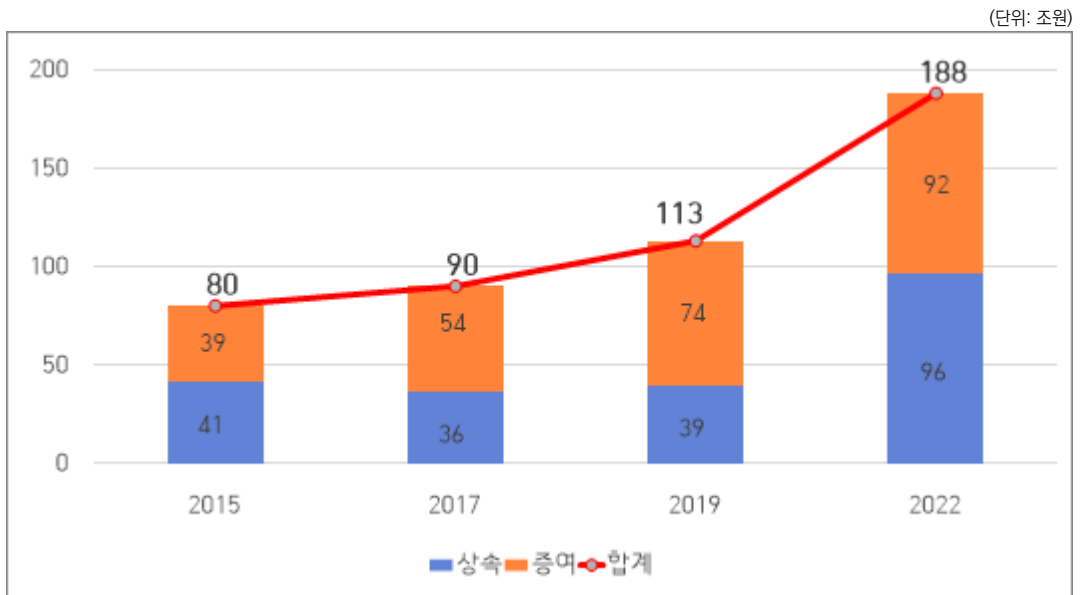
자료: https://www.datapulse.de/wp-content/uploads/2025/06/Self-Made-Global_EN-1-819x1024.png

[그림 20] 상속 vs. 자수성가

- 세습 자본주의는 자산규모, 인구구조, 경제성장 등에 영향 받음
 - 최근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 모두 둔화되면서 국민소득이 정체되면서 자산 격차가 커짐
 - 현재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5이지만 순자산은 1/2을 보유
 - 아일랜드, 미국과 같이 성장률이 건조한 나라에서는 Inheritocracy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2)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세습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착 심화
 - 2024년말 억만장자 중 상속자 비율이 58%에 달함
 -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인구 고령화, 저성장으로 세습 자본주의 기반이 견고
 -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생애 전반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상속·증여 금액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증가세
 - 2015년 80조 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5%에서 2022년 188조 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8.7% 수준으로 급성장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1] 한국의 상속 및 증여 규모

- 참고: 결혼
 - 우리나라의 소득 동질화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데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 등 가구구조도 결혼이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
 - 현재로서는 상식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정착될 가능성
 - 앞으로 매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의 자산이 상속·증여 된다면 자산 동질화 가능성이 높아짐

3. 경기적 원인

1) 부동산 거품과 주거 양극화의 연쇄 작용

-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동력은 단연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뛰어넘는 부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⁷⁾
 -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자산 소유자와 무소유자 간의 격차를 심각하게 확대
 - 많은 실증연구들도 최근의 순자산 불평등 심화는 자가 보유 가구와 무주택 가구 간의 순자산 차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⁸⁾
 - 이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적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함(한국금융연구원 2024)
-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 격차를 벌릴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까지 박탈
 -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무주택 청년들은 저축을 통한 자산 축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반면, 부동산을 소유한 상위 계층은 근로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자본이득을 취하게 됨
 - 자산이 자산을 낳는 불로소득의 고리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산불평등 확대

2) 주식시장 등락과 자산 양극화

-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거품 형성과 붕괴 또한 자산 양극화를 심화
 - 주식시장 거품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부의 양극화를 심화⁹⁾
 - 상위권의 주식 및 배당 소득 집중으로 주식시장 폭등에 따라 자산불평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

⁷⁾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은 자산가격 변화가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

⁸⁾ 박정재 외(2024), 오민준(2022), 보건사회연구원(2025), 국토부(2025) 참조.

⁹⁾ 박의환·김동현(2023); Kim and Nilsen(2026).

- 그런데 주식시장의 거품이 커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거품의 붕괴 과정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김인준·이영섭 2023)
-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금융부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새로운 투자자들의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
- 새로운 투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투자 손실과 더불어 채무부담 급증으로 부의 분배는 거품 붕괴 과정에서 더욱 악화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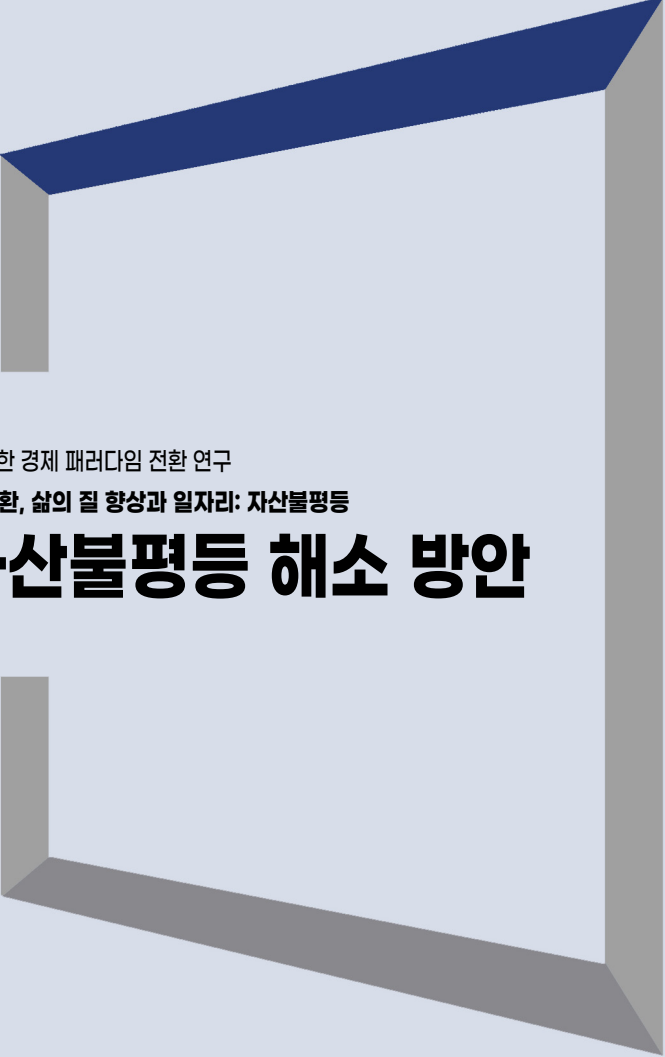
4. 정책적 원인

1) 세제 왜곡에 따른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괴리

-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산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
 - 우리나라의 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자본소득이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형적 구조를 유지(한국 경제인연합회 2024)
 -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부의 원천인 자산에 대한 과세가 미비하여, 자산이 소득보다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
- WID(2026)의 분석
 - 한국의 상위1%가 보유한 부의 집중도는 자본소득의 비과세 혜택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데, 특히 법인 유보이익에 포함된 사적 지분이 사실상의 세습 자산으로 기능하며 불평등을 지탱
 - 이는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요소

2) 모순 투성이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바 큼
 -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진단,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순서 등 상당 부분 잘못됨
 - 가격 폭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돈이 과도하게 풀린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과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에 투기가 가세한 것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되찾아야 함
 - 대다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거 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이슈에 이념적으로 접근(김인준·이영섭 2023)
 -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수요 억제로 일관한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 원인
 - 또한 아파트 수요가 주거 안정과 동시에 노후를 대비한 투자 수요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투기꾼들 때문이므로 투기 규제 지역 확장, 대출 규제 강화, 세율 상향 조정하면 투기 수요를 막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음
 - 아파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올려, 거래가 크게 줄고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초래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V.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

V.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

● 경제적 불평등의 역사적 현실

- 스탠퍼드 대학의 사이델(Walter Scheidel) 교수는 그의 저서(The Great Leveler)에서 인류 역사상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는 오직 극단적인 폭력과 재앙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네 명의 기수(Four Horsemen)’라고 명명
- ① 전쟁(Mass-Mobilization Warfare):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총력전은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고율의 누진세 도입, 초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유층의 자본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불평등 완화
- ② 혁명(Transformative Revolution):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처럼 사유 재산제를 폐지하고 엘리트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혁명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평등화를 가져옴
- ③ 국가 붕괴(State Failure): 로마 제국이나 당나라의 몰락처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와해될 때 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며 불평등 해소
- ④ 전염병(Lethal Pandemics): 흑사병과 같은 대규모 역병은 인구를 급감시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하층민의 처우를 개선해 불평등 완화하는 효과

● 평화와 번영의 역설

- 역사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시기는 거의 언제나 대규모 폭력과 재난이 동반되었으며, 평화롭고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깊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줄인 사례가 거의 없음
- 전쟁·혁명·붕괴·역병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에는 예외 없이 불평등이 심화됨
- 깊게 뿌리내린 불평등을 질서있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
- 평화적 개혁만으로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음

- 몇 가지 쟁점: 정부 개입 vs. 자유 방임
 - 주류 경제학: 불평등은 경제 법칙의 필연이므로 정부 개입은 비효율 초래
 - 비주류 경제학: 불평등은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므로 강력한 정부 개혁정책 필요
- 몇 가지 쟁점: 정부 개입 접근 방식
 - 경제적 접근: . 안정화, 경제성장
 - 제도적 접근: 재분배 정책, 소유의 민주화, 기본소득
 - 도덕적 접근: 능력주의를 넘어서?

1. 경제적 접근

1) 안정화

- 부동산 시장 안정
 - 과도한 자산시장 버블은 급등할 때 뿐만 아니라 붕괴될 때도 불평등 악화
 -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급변동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도 안정화 관련 대책 필요
 - 부동산 시장 거품과 붕괴는 경제안정, 금융안정, 주거안정을 깰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를 함께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최우선
 -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춘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인식하고, 투기를 막아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주거 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이슈에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실패
 -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
 - 부동산 관련 규제에는 지역 규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거래제한 규제 등이 있는데,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요를 촉진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 보유세 증대, 거래세 감소 등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요 선호 지역 공급 확대: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택지 개발을 소홀히 한 채 재건축을 억제하고 고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됨: 그린벨트 개발도 고려
 - 시장 중심 개발정책과 공공 개발정책을 병행: 시장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전월세 지원, 주거급여 확대, 주거비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부동산 안정화 정책 관련 제언: 과거 정부의 동일한 실패 반복하지 말 것
 -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진정으로 관심있었는지 의문
 -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워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 숨길 수 없었음

-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인하 고려하는데 효과 미미: 부동산 조정 효과 없애고 오히려 다시 자극 우려
- 금리정책을 경기부양에 동원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자산버블, 건전성 악화 등의 후유증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 금리정책의 실물 경제와의 연계는 약화된 반면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남
- 경기침체 우려, 환율 급등, 대외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경제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금리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분야 금융중개지원 대출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주식시장 안정
 - 금융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불평등보다 크고 향후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주식시장 안정 대책 마련 필요
 - 국민 주주 시대: 증권사 계좌 수가 2026년 1월 말에 1억개 돌파, 예치 현금 130조원 초과
 - 버핏지수 120 이상이면 거품으로 인식하는데, 현재 거의 250~300 가까이 됨
 - 주식시장 급등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수가 너무 급속히 증가
 - 개인투자자들이 상투잡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면 하락장에서 큰 손해 볼 가능성
 - 게다가 개인투자자 주식 매입의 상당 부분이 가계대출, 즉 빚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하락장에서 가계의 손실 부담이 그만큼 더 크며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
 -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쓰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길게 봐선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움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 주식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실물시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필요

2) 경제성장

- 경험적 사실
 - 과거 위기 사례에서 지나친 경기침체는 성장은 물론 분배도 동시에 악화
 - 저성장기에는 당대에 부를 모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짐(안국신 2021)
 - 저성장기에는 가난의 대물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 피케티가 말한 세습 자본주의, 신 세습사회 고착

- 대부분의 불평등 대책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정책
 - 그러나 보다 필요한 정책은 하위층의 자산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성장친화적인 재분배정책
 - 경제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특히 극빈층이 타격을 입고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
 -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재분배정책을 넘는 불평등 해소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 분배정책보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빈곤층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함
- 경제성장을 통한 불평등 해소는 복지 정책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음
 - 경제활성화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은 정부의 인위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시장의 활력을 높여 파이도 키우고 이익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청년·서민층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 1. 인적자본 투자
 - AI, 첨단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청년과 구직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가 주도 교육 인프라를 구축
 - 평생교육훈련제도 등을 강화해 기술 진보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취약계층의 직무 능력 제고하고 기술 양극화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방지
- 2.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 및 이로 인해 파생된 부의 격차는 상당 부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
 -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두터운 장벽이 존재하면 양극화는 풀리지 않음
 - 최근 삼성전자/하이닉스로 대변되는 K-자형 성장의 문제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났듯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 경제성장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향유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경제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

● 3.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이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등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및 정비하여 모빌리티, 바이오 등 신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세제 혜택 증대 필요
-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신기술 개발 부진보다도 노동시장 경직, 정부 규제 등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더 크므로 정부는 부정적 요인의 해소에도 주력해야 함

● 4. 교육 및 사회적 이동성 강화

- 취약계층 자녀에게 영유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 교육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노력(김인준·이영섭 2023)
-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유망 산업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무료 직업 훈련 과정을 확대
- 기본적으로 취학 이전의 보육기능은 공립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독박 육아와 경력 단절을 방지

● 5.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관광, 의료,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인센티브를 지방 혁신 도시로 분산
- 각 지역 내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지방 경제 스스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자생력 확보 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되며, 지방 부동산 및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 가능

2. 제도적 접근

1) 재분배 정책

- 다양한 세제 아이디어
 - 소득 누진세 강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자본소득(주식·채권) 세율을 근로소득 수준으로 인상
 -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상속·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
 - 자본이득세 강화: 법인의 유보 이익 중 개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를 도입하고, 금융자산의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여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통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유세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되,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 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이나 임대주택 확충에 사용
 - 개발이익 환수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 인프라와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규제 아이디어
 - 기본소득제: 중산층 이하 가구에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소득 보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¹⁰⁾
 - 마이너스(-) 소득세: 특정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마이너스(-)의 세금 형태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소득세 제도
 - 이익공유제: 기업이 거둔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나 협력업체와 나누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
 - 최저임금 연동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
 - 주택연금 제도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여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사후 남겨진 주택 자산은 사회적으로 재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 최고임금제: 임금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임금을 규제하는 방안

¹⁰⁾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일부 차이가 있음. 한편 미국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은 사유화된 토지를 몰수하여 공유화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급진적 주장과 달리 사유화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이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재분배하는 것임(김태근 2023).

● 부유세 논란¹¹⁾

- 자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다수 국가는 부유세 폐지 또는 자산별 (부동산, 금융 자산) 분리 과세
- 1980년대 중반, OECD 국가의 절반이 가장 부유한 거주자들에게 연간 순자산세를 부과했으나, 오늘날 유럽에서는 스페인, 노르웨이, 스위스만이 개인의 전체 순자산에 대한 세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정부가 거두는 세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Financial Times, 2025.9.17.)
- 이러한 추세는 현실적 어려움 및 실질적 유효성 등을 반영한 결과
-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자산 기반 과세의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난관이 많다고 지적
- 행정과 집행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부를 정의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 특히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게다가 초부유층은 세금을 회피할 유인이 가장 크고 최고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활용하거나 해외로 이동해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금을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재산, 증여 및 상속, 자본 이득에 대한 기존의 부과금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

● 부유세 강화 방안 사례

① France

- 프랑스 경제학자 주크만(Gabriel Zucman) 교수는 부동산, 주식, 기업 대주주 지분 등 총 자산이 1억 유로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년 2%의 '글로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
- 과세 대상 및 기준: 일반적인 소득세나 복잡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자산 총액에 대해 최소한 2%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
-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세(exit tax) 도입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며, 주요 국가 간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
- 기대 효과: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심각한 국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부의 과도한 집중을 막는 데 기여
- 이 아이디어는 작년 G20에서 논의되었으나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으며, 주크만 교수는 고국인 프랑스에서 자신의 제안을 채택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¹¹⁾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문제점, 해결 방안 아이디어는 참고문헌에 소개된 Economist 지 기사들을 참조할 것.

② 미국 California 주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체 순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억만장자 부유세'를 추진
- 납부 조건: 천문학적인 세액을 고려해 5년 분할 납부 옵션 제공
- 세수 목적 및 용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등 의료 예산과 교육 및 식품 지원에 사용
- 캘리포니아 의료노조가 주도하여 주민 발의 형태로 추진 중이나, 과세 대상자들이 '미실 현 이익 과세'라는 점에 강력히 반발
- 마크 저커버그(메타),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구글) 등 빅테크 창업자들이 플로리다 등 세금 부담이 적은 주로 자산을 이전하는 '부자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③ 기타: Economist(2024)

- 로베인스(Ingrid Robeyns) 교수(네덜란드 Utrecht 대학): 국가는 누구라도 1,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축적을 금지해야 함. 그리고 정부가 의료복지와 연금을 지불하는 국가에서는 누구라도 100만 달러 이상의 저축을 해서는 안됨
- 힐드야드(Luke Hildyard) 소장(런던 High Pay Centre): 누구라도 현재 상위1% 납세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2021년 기준 대략 33만 달러)을 벌어서는 안됨

2) 자산 평등화: 소유의 민주화 지향¹²⁾

● 사회상속제(Social Inheritance)

- 사회상속제는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현재의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 모든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초기 자산(목돈)을 지급하는 제도
- 개인의 유산 상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징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일반 예산이 아닌 별도의 '청년 자산 기금'으로 조성해 모든 청년에게 사회가 '공통의 유산'으로 지급
- 기대 효과: 청년들이 부채(학자금 대출)가 아닌 자산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모험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

¹²⁾ 이 부분은 일부 AI 검토 내용을 참조해 정리.

- 기본자산제(Universal Basic Assets)

- 기본소득이 매달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한다면, 기본자산제는 개인이 생산수단이나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짐으로써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시도
- 기업의 소유 구조에 노동자나 지역 사회의 지분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 및 지역사회와 공유되도록 함
- 데이터, 토지, 환경 자원 등 사회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화하여 전 국민에게 자산 배당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자산소득의 보편성을 확보

- 해외 사례

-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2005년 토니 블레어 정부가 도입했던 자산 형성 제도로, 아동이 태어날 때 정부가 기금을 개설해 주고 일정 금액(약 250~500파운드)을 예치해 준 뒤 18세가 되면 인출할 수 있게 한 사례
-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아동기부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저축해 주어 성인기 자산 형성으로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자산 지원 시스템
-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 미국 연방정부가 신생아 및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비과세 투자 계좌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 명의의 계좌에 초기 자금으로 \$1,000(약 150만 원)를 지급하고, 부모, 친척, 고용주 등이 연간 최대 \$5,000까지 추가 납입 가능

3. 도덕적 접근

1) 능력주의(Meritocracy)¹³⁾

- 기본 설명

- 출신 배경, 신분,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 노력, 성취도와 같은 객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나 부, 권력을 분배
- 공정한 선발과 보상 체계로 국가 경쟁력, 혁신, 행정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
- 능력주의는 경제성장과 산업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적 이동성 확대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

- 능력주의의 핵심 내용

- 공정한 경쟁: 신분제 사회의 세습 특권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지향
- 객관적 평가: 시험, 학위, 실적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직업이나 자원을 할당
- 사회 이동성: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급 상승이 가능하여 역동적인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음

- 능력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 ① 고대와 전근대:

- 중국 과거제: 세계 최초의 체계적 능력주의 실험을 통해 혈통 귀족을 견제하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 유럽 중세는 혈통 귀족 중심이었고 능력주의는 주변적

- ② 근대 국가의 탄생: 프로이센, 프랑스, 영국

- 군대·관료제·교육제도 개혁, 시험, 전문 훈련, 성과 평가 도입
- 영국의 경우 인도 식민지 행정에서 시험제 관료제 확립 후 본국으로 역수입

- ③ 미국식 능력주의

- 미국은 귀족 부재 사회에서 대학 입학, 전문직, 기업 중심의 능력주의 발전
- 아이비리그, 표준시험(SAT 등)은 개방성과 엘리트 선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

¹³⁾ 이 부분은 일부 박명호(2026)를 참조해 정리.

- 능력주의의 타락

- 오늘날 능력주의가 공격받는 이유는 능력주의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고 변질되어 자산 세습 이상으로 불평등 고착의 원인이 되기 때문

- ① 엘리트의 세습화

- 고소득·고학력층이 교육, 주거,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자녀에게 이전
- 능력주의가 사실상 “신(新)귀족제”로 변질

- ② 시험과 자격의 과잉

- 시험은 공정성을 보장했지만 시험 대비 능력 자체가 계급화
- 진짜 능력보다 시험 전략, 학벌, 인증서가 중요해짐

- ③ 대중의 분노

- 능력주의는 패자를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 그 결과 포퓰리즘, 반 엘리트 정서, 정치적 분극화 심화

-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의 폐기 아닌 개혁과 재설계 필요

-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개혁
- 승자독식 완화를 위한 배분구조 개혁
- 노동가치 존중을 위한 사회적 인식 재편

2) 사회적 공유

-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덕적 접근은 부의 축적을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와 운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상호 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
- 능력주의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등을 강조

- 사회적 책무감

-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강조: 평등이란 소득을 완전히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존중받는 상태(Sandel 2020)
- 재능의 사회적 공유: 타고난 지능, 신체적 조건, 유복한 부모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운’으로 얻은 이익은 전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간주

- 불운의 보상제: 선천적 장애, 예기치 못한 질병, 경기 침체 등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운으로 발생한 자산 손실을 사회가 도덕적으로 보상
- 공동체적 기여 보상: 금융 투자나 부동산 시세 차익처럼 생산성 낮은 자산 증식보다, 돌봄 노동·청소·교육 등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필수 노동에 도덕적 가치와 높은 경제적 보상 부여
- 부의 사회적 책무감: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이 자신의 성공을 사회 인프라와 공동체의 협력 덕분에 인정하고, 자발적 기부나 연대 기금을 통해 부를 환원하도록 유도
- 사회적 연대감
 - 조건 없는 인간 존엄성 보장: 자산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적 생존 조건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보편적 기본 권리로 제공
 - 사회적 혼합 확대: 주거 지역이나 교육 환경이 자산 수준에 따라 격리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서로 다른 계층이 일상에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도덕적 공동체를 구축

4. 몇 가지 제언

1) 현실 인식: 소득보다 자산불평등 훨씬 심각

-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OECD 국가에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은 일부 개선되는 조짐도 나타남
 - 그러나 자산불평등의 경우 대부분 최근 들어와 더욱 악화되는 추세
- 자산불평등의 경우 해소방안을 찾기 어려움
 - 소득불평등의 경우 재분배정책을 통해 일부 개선 가능
 - 비록 시장소득기준 소득분배지수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기준 소득분배지수는 대부분 개선되고 있음
 - 자산불평등의 경우 다양한 재분배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가능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 제시하기 어려움
 - 부유세 등을 동원해도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일부에서 재산 강제몰수 및 인위적 배분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 가능한지 강한 의구심
- 두 가지 접근 원칙
 -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함
 - 첫째, 전체 파이의 크기 감축말아야 함: 성장친화적이면 최선이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장방해적인 아이디어는 지양
 - 둘째, 보편적 혜택보다 취약층에게 혜택 집중되어야 함: 보편적 퍼주기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과 제고
- 다양한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들은 크게 상위 계층 소득 및 부를 감축시키는 방안들과 취약계층 상향시키는 방안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진보진영에서는 주로 전자의 아이디어들을 선호하는 반면, 주류경제학으로 대변되는 자유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후자 선호
 - 최근 들어 자산불평등 악화된 것은 주로 부유층 자산이 빨리 증가한 데 기인: 이를 근거로 대부분 부유층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

- 그러나 파이 크기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불평등 해소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층 그룹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
- 앞의 여러 방안 중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 실행이 더 효과적
- 가능하다면, 전체 그룹에 대한 평등보다 극빈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부유층 자산 비중 감소보다도 빈곤층 자산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
- 특히 청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은 기회 평등, 경제활성화 재창출, 결과적 불평 등 완화 등 다양한 효과 나타날 수 있음

2) 현실적 방안

● 부동산시장 및 자산시장 안정화

-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과도한 자산시장 버블은 급등할 때 뿐만 아니라 붕괴될 때도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특히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자산시장 변동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자산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화 정책 필요
- 부동산 정책은 주거정의 차원에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접근보다 수요 및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장중심 개발정책 바람직: 현 정부가 선거 때 공급 확대 공약과는 달리 집권 이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실책(권도경 2026)
- 특히 선호지역 주거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그린벨트 개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공공개발정책 병행도 고려
- 최근 들어와 금융자산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자산보다 불평등이 더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에서 금융자산 안정 대책으로 안정화 정책 확대 필요
- 현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핍박하고 주식으로 불로소득 챙기는 사람은 응원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주식시장 과열이 경제 펀더멘탈과 과도하게 이격되어 있는 경우 금융 불안정이 위기를 유발하고 취약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이상으로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재분배 정책 및 제도 개혁

- 누진세 강화 등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는 강화되어야 함
- 최근 부유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부유세 도입보다는 재산, 증여 및 상속, 자본 이득에 대한 기존의 부과금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 상속 및 증여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대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필요¹⁴⁾
- 청년자산 기금: 사회상속제 아이디어 응용
 - 모든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초기 자산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 상속세나 증여세 등 부의 대물림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청년자산 기금'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
 - 우리나라에서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 규모는 13.9조원으로 총 조세수입의 3.1%를 차지: 2022년에는 27.7조원에 5.4%까지 증가하기도 함
 - 만 18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 또는 분할 형태로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청년 1인당 약 4,100만 원 규모의 자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실질적인 주거 보증금이나 학자금 상황, 창업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모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06>)
 - 소기의 정책 의도대로 활용되고 퍼주기식으로 무분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구비, 대학 등록금, 창업 자금, 직업 훈련 등 생산적인 자산 형성과 기회 창출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추적 시스템 도입
 - 또한 만 18세 또는 20세에 전액을 일시 지급하는 대신 수차례 연령에 걸쳐 분할 지급하여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 전면 보편 지급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초기에는 소득 분위 하위 50% 청년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재정 여건에 맞춰 범위 확대 고려
 - 청년자산 기금은 경제규모 파이 크기 줄이지 않고 인적자본투자 확대하며 사회적 취약층인 청년층 지원으로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
- 소유의 민주화 방안 현실적으로 조정해 도입
 - 기본자산제 혹은 이익공유제와 일부 철학 공유

¹⁴⁾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급증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미래성장 펀드 등)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연합뉴스 2026)

-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득과 부가 초부자 그룹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도 연계(Economist 2026.06.04 참조)
- 자본이득세도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 vs. 미래 소비선택에 대한 왜곡으로 투자인센티브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따름
- 그렇지만 자본이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경우 자본이득세는 분배효과가 있고 또한 투자 인센티브 저하도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필요: 게다가 AI로 인해 엄청난 추가 렌트 이득이 생기는 경우 초부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투자 저하 효과는 무시 가능
- 좀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초부자들에게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 회사들의 지분을 광범위한 집단이 공유하는 것
- 지분을 직접 배분할 수도 있고 혹은 국부펀드 소유 통한 간접 배분도 가능
- 외견상 조세와 달라 보이지만 수익금 분배에서 법인세와 유사한 효과: 양자 모두 정부가 빅테크 기업 수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분을 제공한다는 개념
- 두 가지 대안 중 지분 공유제의 장점: 조세징수를 통한 수입금을 분배하는 시스템에 비해 AI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좀더 긍정적인 효과 가능
- 또한 빅테크 기업에게 조세피난처 찾을 유인 없애므로 세금징수를 어느 국가가 하는가 라는 문제도 회피 가능
- 초과이익 공유제: 8.3 조치의 기본 정신 활용
 -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어 들이자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사태에서 보듯이 단순히 직원들과의 나눠먹기 식 공유제가 되어서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성장에 도움이 되고 취약층에 혜택이 광범위하게 가도록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정부가 도입했던 8.3 조치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음
 - ‘8.3 조치(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란 1972년 8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기업의 사채 상환을 동결하고 연 16.2%의 저금리로 전환해 준 초법적 금융 정책
 - 이 파격적인 조치로 막대한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은 전경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며 생산성 제고, 근로자 복지, 기업공개(주식 상장) 등을 통해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
 - 기업공개 확대: 소유주 중심의 폐쇄적 경영을 벗어나, 대규모 기업공개를 단행하여 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분산하고 자본 시장의 발전에 기여
 -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증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중화학

공업 육성과 수출 증대에 앞장서며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금융 및 신용 지원 동참: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금 출연 등에 동참하여 중소기업과 농림수산업 등의 자금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
- 기대 효과: 적극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완화, 중소기업-지방 등 취약 부문 지원, 주주기반 확대에 따른 금융자산 불평등 확대 완화 등 다양하게 나타남¹⁵⁾

● 또다른 접근: 능력주의(Meritocracy) 개혁

- 경제 파이를 키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성장친화적 접근은 복지 정책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큰 장점이 있음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장친화적인 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의 돈을 거두어 인위적으로 나눠주는 대신 시장의 활력을 높여 파이도 키우고 이익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능력주의의 폐기 아닌 개혁과 재설계

● 능력주의 개혁은 ‘공정한 기회’를 통한 파이의 확대, 그에 따른 혜택의 공유, 사회적 연대 및 인식의 전환이 핵심

① 공정한 기회를 위한 교육 개혁

- 인적자본 확대를 위한 상위 교육기관 입학의 사회적 다양성 확대 통한 엘리트 개방성 회복
- 이를 위해 대학이 자신에게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 필요
- 또한 중등교육 수준에서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중·고등학교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수용하고 그들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함
- 교육의 조기 격차 완화하고 유아·초등 단계에서 기회 불평등 축소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육시설의 공립화 추진
- 각 단계마다 단일 시험 의존 탈피해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다중 경로 도입

② 혜택 공유를 위한 보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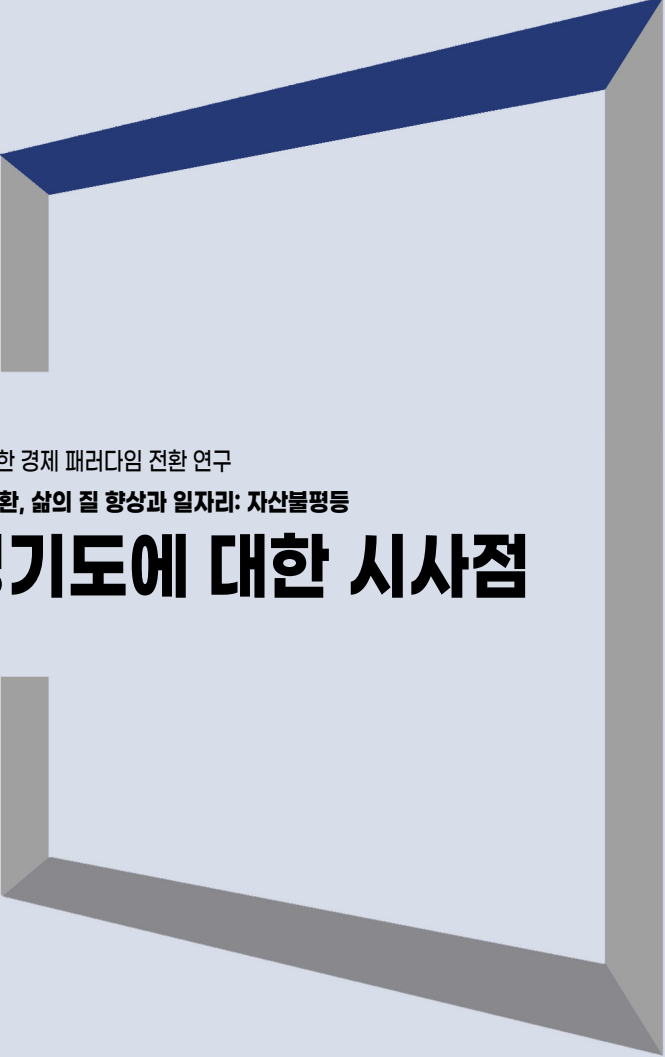
-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혁: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중 하나
-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

¹⁵⁾ 종합적인 의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할 것.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5707>

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

③ 사회적 연대 및 인식 전환

- 엘리트의 책임 강화: 사회적 기여, 공공봉사 등
- 존엄의 재구성: 비엘리트 노동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체계 마련
- 실패의 재도전 보장: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파산 제도의 유연화 및 재창업 지원 등 사회적 패자부활전을 활성화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Ⅵ.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VI.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현황

1) 소득 및 순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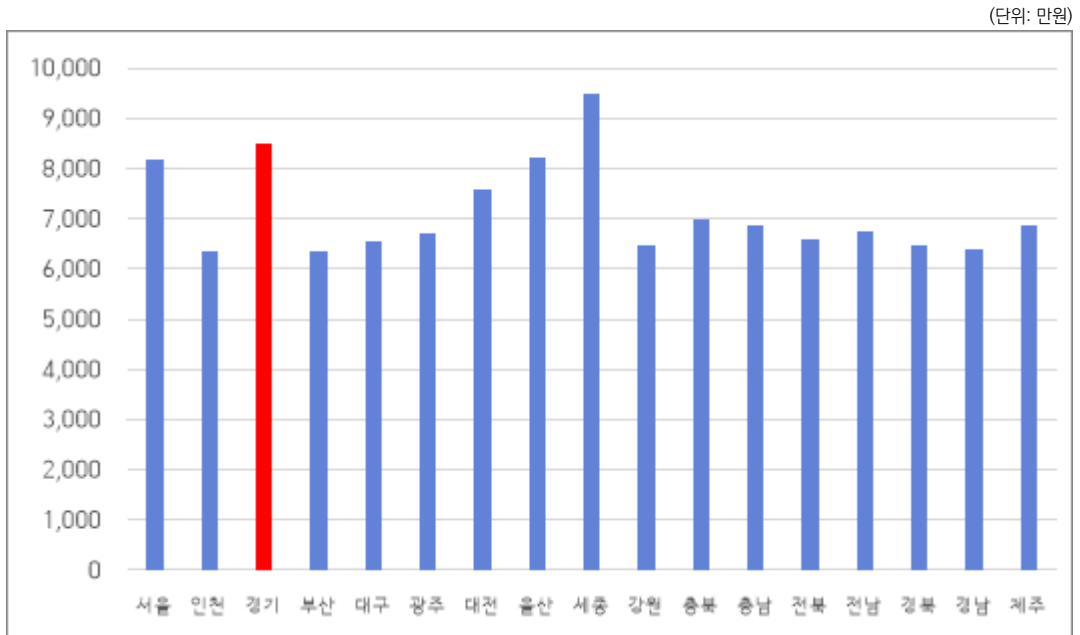
- 소득
 - 2025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7,427만 원(국가데이터처 2025)
 - 소득 순위: 1위 세종 9,482만원, 2위 경기 8,488만원, 3위 울산 8,207만원, 4위 서울 8,164만원
 - 소득 증가율: 전국 3.4%, 경기 3.1%

〈표 7〉 지역별 가구당 소득 및 순자산 (2025년)

(단위: 만원)

지역	소득	순자산
전국	7,427	47,144
수도권	8,118	58,832
서울	8,164	71,288
인천	6,335	30,437
경기	8,488	56,006
비수도권	6,752	35,720
부산	6,349	36,840
대구	6,537	34,865
광주	6,708	35,657
대전	7,588	39,674
울산	8,207	39,240
세종	9,482	60,648
강원	6,479	38,400
충북	6,980	36,607
충남	6,882	32,009
전북	6,587	33,669
전남	6,764	31,640
경북	6,490	33,950
경남	6,392	32,635
제주	6,855	48,10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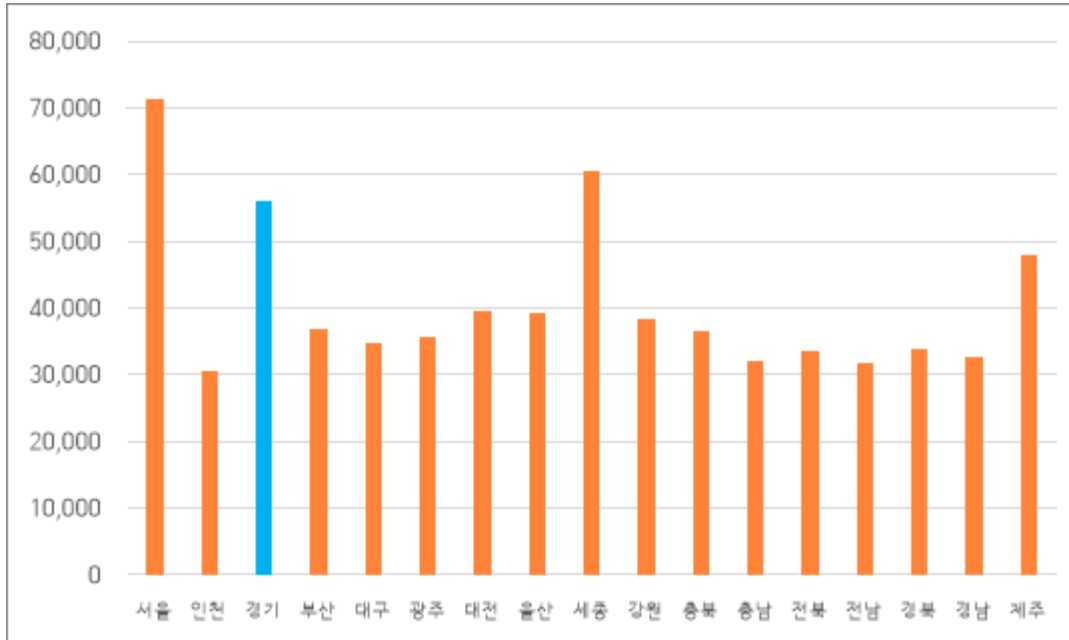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2] 지역별 가구당 소득 (2025년)

● 순자산

- 2025년 전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
- 순자산 순위: 1위 서울 7억 1,288만원, 2위 세종 6억 648만원, 3위 경기 5억 6,006만원, 4위 제주 4억 8,103만원
- 순자산 증가율: 전국 5.0%, 경기 4.3%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3] 지역별 가구당 순자산 (2025년)

2) 경기도의 소득 및 순자산 분배의 특징¹⁶⁾

- 전국 평균 수준의 양호한 분배 정도 보이고 있음
 - 경기도의 소득 5분위배율은 5.6 ~ 5.8 수준으로 전국 평균(5.78)보다 유사하거나 다소 낮음
 - 경기도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0.31~0.32 안팎으로 전국 평균(0.325)과 비슷하거나 이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
 - 서울이 높은 평균 소득에도 불구하고 초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로 인해 불평등도가 높은 반면, 경기도는 중산층이 두터워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양호한 편
- 순자산도 서울 대비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초고액 자산가가 많아 평균 순자산이 매우 높지만, 경기도는 대규모 신도시(분당, 일산, 판교, 광교 등)가 발달해 중산층 가구가 고르게 분포해 있어 서울보다 순자산 격차가 작게 나타남

¹⁶⁾ 이 내용은 SI 검색을 일부 참조해 정리.

- 경기도 내 지역간 소득 양극화 존재: 남북 간 격차
 - 남부 지역은 수원, 판교, 화성, 평택 등에 대기업 및 IT·제조업 기반의 양질의 근로소득 일자리가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 소득이 높음
 - 반면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북부 지역이나 외곽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및 빈곤층 비중이 높고 소득원이 취약해 경기도 내부적으로 시·군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지역 간 격차는 순자산 분포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
 - 대기업 생산 시설 및 IT 밸리가 밀집하고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된 수원, 성남(판교), 화성, 평택 등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 서울 인접 지역 및 주요 신도시의 집값 상승은 경기도 내 상위 계층의 순자산을 대폭 늘림
 - 반면, 인프라 및 규제 한계로 개발이 더딘 북부 접경 지역 및 외곽 농촌 지역에서는 개발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작게 나타나 지역 내 순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
 - 이러한 도내 지역 간 격차는 남부 중심의 행정과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정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낳기도 함

2. 경기도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경기도의 특성 및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 경기도 내에서는 계층 간 불균형 이슈보다 전국 내 분포, 최고 지역과의 격차가 더 큰 관심: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
 - 경기도 내에서 도·농 간 격차보다 남북 간 지역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북부 지역 특화 개발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 필요
- 본 연구과제를 경기도에 활용하려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 요구
 -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시행 범위 확대
 - 기타 현 구조내에서 가능한 정책 우선 실행 등

1)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 요구

-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 부동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수도권 개발 제한을 완화해 수도권 전체의 수요·공급 균형 및 안정화
 - 그린벨트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선호지역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 추진을 경기도에 허용해 강남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여러 곳 만들 필요¹⁷⁾
 - 동시에 주식시장 과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안정화 주력 필요: 부동산 투기는 죄악시 하고 주식 투기는 장려하는 모순된 인식을 지양해야 함¹⁸⁾
- 경기 북부 지역 인프라 개발
 -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기 북부와 남부 간에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경기 북부 지역에도 국가 차원에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¹⁹⁾

¹⁷⁾ 손재영(2025)은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을 부동산 안정의 유효한 방안으로 강력히 제안하고 있음. “박정희 정부가 1971년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유사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려는 국방 전략의 일환이었고, 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후세를 위한 여유 공간을 남겨 놓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세가 누구냐. 지금 우리다. 우리 세대 쓰라고 저축한 땅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해제를 해도 환경적인 부작용이 없는 땅이 굉장히 많다. 특히 서울 인근에 농업을 위해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지역을 과감히 풀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5/11/06/UN52S2KDY5AC7EHBV3EPEHNLNU/>)

¹⁸⁾ “빛내 집도 못사게 하면서...삼전·닉스 2배 투기판 열어 준 정부”. (방윤영 2026)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로 남부 지역에 치중되어 있던 GTX 연선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경기 북부 및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완공하여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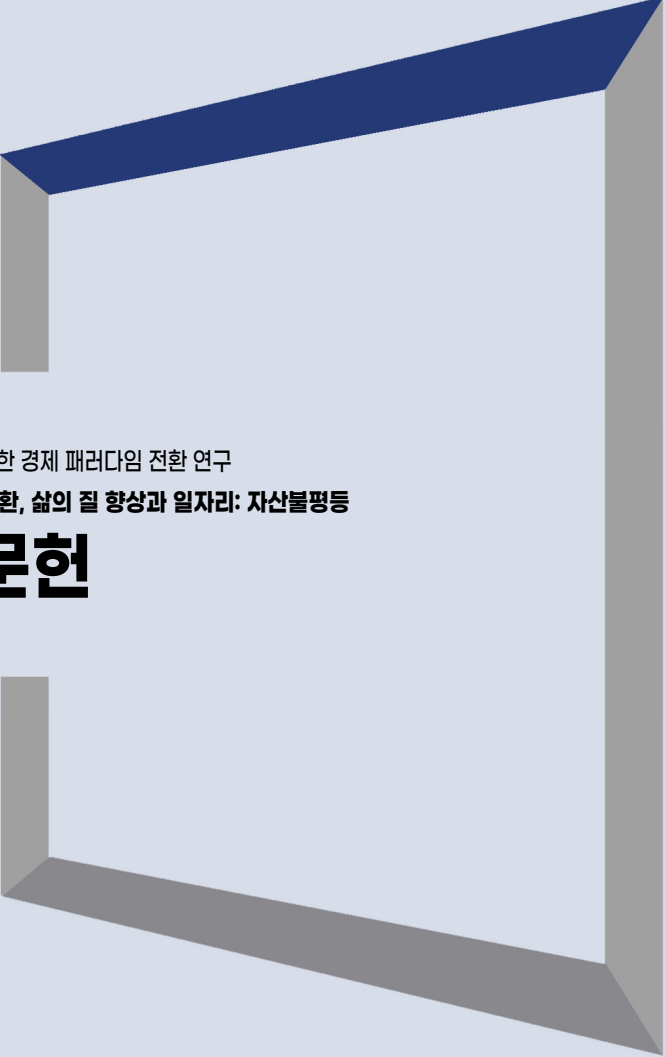
2)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확대

- 청년자산 기금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자산 기금 아이디어를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을 기금 추가 재원으로 활용
 - 모두에게 나눠주지 말고 경기 지역 청년창업자를 특정해 추가 지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임금 지원 펀드로도 활용
- 개발이익 환수제 지역 활용
 -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경기 북부 지역 개발 방안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환수하여 청년층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
 -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 집중해 주거 및 관련 금융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
 - 경기도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재형저축에 매칭 지원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들의 초기 순자산 형성을 도와줌

3) 기타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 능력주의 개혁의 기본 인프라 강화
 -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조기 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도내 보육시설 공립화를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전면 추진
 - 또한 인적자본을 양성하고 다양한 재능 평가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자사고 설립을 장려하고 지역할당 확대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안전망 강화
 -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 및 재취업 알선
 - 지역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세대별로 공유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동시에 보육,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업도 육성해 세대별 특화 일자리 지원 대책 추진

¹⁹⁾ 최근 정부가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8/134133156/2>)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용노동부. (n.d.).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 고용노동부. (2025).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국가데이터처. (2025).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2025). 2025년 주거실태조사.
- 국회미래연구원. (2024).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
- 김시원. (2018).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임계(threshold) 효과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20(3), 5-36.
- 김인준. (2026). 선진국 함정과 우리의 극복 과제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 김인준, & 이영섭. (2023).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 율곡출판사.
- 김태근. (2023). 미국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의 현황과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 박명호. (2026). 성장전략과 불평등 [발표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
- 박의환, & 김동헌. (2023). 금융불안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래성장연구.
- 박정재 외. (2024). 부동산 가격 변동과 경제불평등과의 관계: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
- 안국신. (2021). 한국의 분배. 율곡출판사.
- 오민준. (2022).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 이강국. (2023, 6월 2일). 불평등 확대가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306021129571>
- 이영섭 (편). (2013). 한국 정치·경제 개론.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준구, & 이창용. (2025). 경제학원론 (제7판). 문우사.
- 조순, 정운찬, 전성인, & 김영식. (2024). 경제학원론 (제12판). 율곡출판사.

- 한국경제인연합회. (2024).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연구원. (2024). 부동산 가격 변동과 경제불평등과의 관계: 자산과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 한국은행. (2010).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금융경제연구 제425호).

해외 문헌

- Berg, A. G., Ostry, J. D., Tsangarides, C. G., & Yakhshilikov, Y. (2018).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New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Growth*, 23, 259–305.
- Credit Suisse. (2021). Global wealth report 2021.
- Davies, J. B., & Shorrocks, A. F. (2000).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A. B. Atkinson &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 Hildyard, L. (2024). *Enough*. Pluto Press.
- Kim, D., & Nilsen, J. (2026). Decomposing the credit-wealth corre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1). The rise and rise of the global balance sheet: How productively are we using our wealth?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financial%20services/our%20insights/the%20rise%20and%20rise%20of%20the%20global%20balance%20sheet%20how%20productively%20are%20we%20using%20our%20wealth/mgi-the-rise-and-rise-of-the-global-balance-sheet-full-report-vf.pdf>
- Milanovic, B. (2012). Global income inequality by the numbers: In history and now—An overview. World Bank.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 OECD. (2021). *Does inequality matter? How people perceive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Publishing.
- Pew Research Center. (2025). Economic inequality seen as major challenge around the world.
- Piketty, T., & Sandel, M. J. (2025). Equality: What it means and why it matters. Wiley.
- Piketty, T., & Zucman, G.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Robeyns, I. (2024). Limitarianism. Astra House.
- Sandel, M. J. (2021). The tyranny of merit: Can we find the common good? Picador.
- Scheidel, W. (2017).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enbrink, R., & Skali, A. (2026). Wealth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World Development, 199.
- UBS. (2025). Global wealth report 2025.
- Wooldridge, A. (2021). The aristocracy of talent: How meritocracy made the modern world. Skyhorse Publishing.
- World Inequality Database. (2026). World inequality report 2026.
- Zucman, G. (2026). We need to tax billionaires. Basic Books.

웹페이지

- 국민일보. (n.d.). 내 주식만 박살 아니었네: 한 증시 종목 82%가 하락.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1800?lfrom=kakao>
- 권도경. (n.d.). 실패한 부동산 정치. 문화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1/0002796415?cid=1077352>
- 나무위키. (n.d.-a). 능력주의. <https://namu.wiki/w/%EB%8A%A5%EB%A0%A5%EC%A3%BC%EC%9D%98>

- 나무위키. (n.d.-b). 덩크족. <https://namu.wiki/w/%EB%94%A9%ED%81%AC%EC%A1%B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d.).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6>
- 동아일보. (2026, 6월 18일). 민통선 평균 2km 북쪽으로 옮겨…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완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618/134133156/2>
- 류이근. (n.d.). 거대한 ‘부의 세습’ 속도, 소득 증가보다 3배나 빠르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19868.html
- 박재현. (2023, 8월 20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배 늘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0051400002>
- 방윤영. (2026, 6월 14일). 빚내서 집도 못 사게 하면서…삼전·닉스 2배 투기판 열어준 정부.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stock/2026/06/14/2026061215334914281>
- 손재영. (2025, 11월 6일). 초강력 대출규제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2025/11/06/UN52S2KDY5AC7EHBV3EPEHNLUMU/>
- 연합뉴스. (2026, 6월 13일). 초과세수 활용법 새판 짬다…기금·펀드 ‘미래투자’ 다각도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3040300002>
- 유니프레스. (n.d.).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큰 문제…데이터로 확인됐다.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0>
- 정준호. (2026, 4월 14일). 소득만으론 깨기 어려운 불평등…자산 구조 재정립해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42102005>
- 통계청. (n.d.).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핀포인트뉴스. (n.d.). 사회상속제 2026년 도입 시, 청년 1인 약 4,100만 원 자산 형성 가능.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0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8·3 조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5707>
- 한국은행. (n.d.).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s://ecos.bok.or.kr/#/?langCd=kor>
- Data Plus. (2025, June). Self-made global [Image]. https://www.datapulse.de/wp-content/uploads/2025/06/Self-Made-Global_EN-1-819x1024.png

- Financial Times. (n.d.). Problems with taxing the rich. <https://www.ft.com/content/43ab44ef-359e-4af8-bded-093be6e56f4d?syn-25a6b1a6=1>
- OECD. (n.d.).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s.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html>
- The Economist. (2024, March 22). The fallacious case for abolishing the rich. <https://www.economist.com/culture/2024/03/22/the-fallacious-case-for-abolishing-the-rich>
- The Economist. (2025, February 27). How to get rich in 2025.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5/02/27/how-to-get-rich-in-2025>
- The Economist. (2025, October 2). Don't tax wealth.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5/10/02/dont-tax-wealth>
- The Economist. (2026, February 4). A 5% wealth tax would drive billionaires out of California. <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26/02/04/a-5-wealth-tax-would-drive-billionaires-out-of-california>
- The Economist. (2026, February 16). The Robin Hood state is coming for the rich.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6/02/16/the-robin-hood-state-is-coming-for-the-rich>
- The Economist. (2026, February 19). Don't go after the rich to fix broken budgets.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02/19/dont-go-after-the-rich-to-fix-broken-budgets>
- The Economist. (2026, March 12). China is wrestling with a novel phenomenon: Inherited wealth.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6/03/12/china-is-wrestling-with-a-novel-phenomenon-inherited-wealth>
- The Economist. (2026, May 14a). How to share the AI windfall.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6/05/14/how-to-share-the-ai-windfall>
- The Economist. (2026, May 14b). Prepare for an AI jobs apocalypse.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05/14/prepare-for-an-ai-jobs-apocalypse>
- The Economist. (2026, May 14c). The jobs apocalypse: A very short history.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6/05/14/the-jobs-apocalypse-a-very-short-history>

- The Economist. (2026, June 4a). How to fight back against Gen Z socialism.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06/04/how-to-fight-back-against-gen-z-socialism>
- The Economist. (2026, June 4b). Some billionaires pay too little tax.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6/06/04/some-billionaires-pay-too-little-tax>

■ 집필진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성장전략의 대전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자산불평등

발행인 윤덕룡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Tel. 031-270-9600 Fax. 031-270-9732
홈페이지: www.gjf.or.kr
편집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409, 904, 905호
Tel. 02-2672-1535
E-mail. yb1555@yeobaek.com
ISBN 979-11-24368-27-5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1-270-9600

재단 | <https://www.gjf.or.kr>

꿈날개 | <https://www.dream.go.kr/dream>

잡아바 | <https://www.jobaba.net>

꿈마루 | <https://www.dreammaru.or.kr>

